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00-00

정책보고서 2019-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연구



박종서 외

**【책임연구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2016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

## 제출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서 외



## 공동연구진

성명	소속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오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임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문승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임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목 차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	31
제2장 지역별 정책 사례 논의 결과 .....	51
제1절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81
제2절 충청남도 .....	82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	63
제4절 울산광역시 .....	54
제5절 경상남도 .....	55
제6절 부산광역시 .....	95
제7절 강원도 .....	66
제8절 경상북도 .....	97
제9절 대구광역시 .....	19
제10절 충청북도 .....	89
제11절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31
제12절 경기도 .....	15
제13절 인천광역시 .....	11
제14절 전라북도 .....	19
제15절 서울특별시 .....	16

---

제3장 종합 논의 .....	15
제1절 종합 논의 .....	17
제2절 종합 정리 .....	16
부록 .....	181
부록1. 지역 토론회 참여 전문가 명단 .....	181
부록2. 종합 논의 결과 .....	8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진전

- 한국 사회에서 인구문제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유래 없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쟁점화
  -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을 밑돌면서 저출산 사회에 진입했지만,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쟁점화됨.
  - 인구학계에서는 출산율 수준이 낮아진 점을 들어,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2005년에 들어서야 사회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것임.
- 저출산 현상은 필연적으로 고령화 현상을 동반하게 됨.
  - 저출산 현상이 쟁점화되면서 고령화 문제도 함께 사회적 현안이 되었음.

### □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

- 200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을 준비하였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5개년 종합계획으로 범부처 대응 계획임.
-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시행 중이며, 2020년에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1~3차 기본계획과 달리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제기

- 지난 3개 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함.
  - 사회구조,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기술 발전이 새로운 정책환경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체계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출산장려 정책 및 국가주도형 정책 추진방법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새로운 청년세대의 등장과 함께, 청년세대의 가치관, 성장환경 등이 새로운 정책 욕구를 형성하고 있음
  - 특히 젊은(2030) 세대들의 정책 소외감 정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 세대간 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제4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

-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인 국민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과 정책욕구를 청취·확인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단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현황과 정책욕구 파악

- 17개 시도 단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과의 소통·연계를 강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정

책 추진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 모색

##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역별로 정책토론회 개최

- (주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주최하여 토론회를 기획 추진함.
- (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역 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지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각 지역 연구기관이 토론회를 주관하여 진행하며, 특히 발표자와 토론자 및 일반 시민 참여자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형식
  - 토론회는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 발표는 전문가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은 전문가 토론과 시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함.
  - 발표 주제는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지역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지역의 발표 주제는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를 구분하거나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진행함.

- 주안점은 시민 토론 분야로써,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토론회를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함.

□ 중앙과 지역 정책 관련 주체의 협력체계 구축

- 주최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주관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의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자료 및 토론회 발표 자료를 공유하여 토론회의 내실을 기함.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의 정책 소외감 정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 세대간 통합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국민과의 소통·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공감대 형성은 물론, 수렴된 의견의 정책 반영을 통해 국민의 직접적 정책형성과정 참여기회 제공
- 언론 등 외부의 관심·지지 확보에 따른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 동력 강화
-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정책은 부처간 의견검토를 거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제 2 장

# 지역별 정책 사례 논의 결과

제1절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제2절 충청남도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제4절 울산광역시

제5절 경상남도

제6절 부산광역시

제7절 강원도

제8절 경상북도

제9절 대구광역시

제10절 충청북도

제11절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제12절 경기도

제13절 인천광역시

제14절 전라북도

제15절 서울특별시



# 2

## 지역별 정책 사례 논의 < < 결과 <

□ 본 장은 17개 시도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하여 수집된 토론패널의 주요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함.

○ 지역별 토론회는 중앙정부 및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현안과 개선안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됨.

- 단,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저출산 정책, 고령화 정책 중 택일하여 발표를 진행한 경우도 있으나, 종합토론에 있어서는 가급적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관련한 현안을 균형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함. 지역별 발표 주제는 <표 2-1> 과 같음.

<표 2-1> 지역별 발표 주제

지역	발표주제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지역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정책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감소의 불균형: 저출생·고령화 대응 삶의 질 불균형 해소로부터
충청남도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친화환경 조성
울산광역시	-울산지역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정책
경상남도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
부산광역시	-부산시 인구 고령화와 정책방향
강원도	-강원도 저출산 현황과 정책과제
경상북도	-경상북도 저출산 현상과 정책 -경상북도 고령화 정책과 성과
대구광역시	-고령사회 가족갈등과 대응방안
충청북도	-충청북도 저출산·고령화 정책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전남 저출산·고령환경과 정책
경기도	-경기도 저출생 어떻게 풀어갈까
인천광역시	-인천시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과 고령화 대응방안
전라북도	-전라북도 저출생 현황과 관련 정책 그리고 대안
서울특별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서울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주: 1)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발표는 2018년 12월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제구  
조화 로드맵 추진배경 및 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2) 지역별 참여 전문가 리스트는 [부록 1] 에 제시함.

## 제1절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 □ 전문가 패널 A

- 저출산과 관련한 주요한 세 가지 문제는 주거, 노동, 자녀양육 문제로 볼 수 있음.
  -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결혼정보업체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신혼부부 희망정책 1순위가 임대주택 문제임.
    - 지역별 편차는 있겠으나, 소비가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사회에 첫 진입 후 주택을 구입하게 될 때까지 6~10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 현실적으로 보면 최소 15~20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의 지원 밖에는 없음. 다만 부모들 역시 백세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기꺼이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함.
  - 신혼부부의 경우, 5년 이내에 임차에서 자가로 이동 가능한 경우가 30% 밖에 되지 않음.
- 두 번째로는 노동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교육수준이 높아져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고용률은 50%에 머물고 있음.
  -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많이 포용하지 못하며, 이는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량지표로서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괜찮은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적음.

- 여성의 경우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취업률은 남성  
에 비해 더 떨어짐. 또한 경력단절과 관련하여 재취업을 한  
다고 해도 이전보다 못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아울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  
람직할지? 당장은 좋겠지만 5~10년 후를 볼 때, 기업의 부담  
으로 신규채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음.  
무조건적 전환보다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탄력제를 적  
극적 활용하거나, 2~4시간 쪼개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세 번째,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현재는 0~7세까지의 유아를 보육  
하는 데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어 있음. 최소한 0~19세까지 지원  
을 하는 등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에 사회적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를 알아  
야, 출산에 대해서도 적극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생각함.
- 마지막으로 고령화 현상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빈곤이 가장 큰 문  
제임.
  - 45~50세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할 때, 약 50년을 빈곤상태에  
서 살 수밖에 없음. 연금을 받긴 하나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되  
는 수준임. 정년(근로연한)을 현재 60세, 65세로 제한하고 있  
지만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싶음.
- 지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대전 지역에서 왜 서울로 이동을 하는지  
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함.
  - 현재 대전 지역은 서비스업 구조가 많으므로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스타트업 기업이나 유니폼 기업 등을 창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나, 현재 그 단계까지 미치지 못함. 산업구조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 역시 대전 지역에서 고려해 보아야 함.
- 또한 지역 내 개발과 관련하여 대전 지역의 좌-우를 비교할 때, 세종시 발전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좌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음.
- 도심재생 뉴딜사업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공급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된 지역(우측)에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인구를 지역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 □ 전문가 패널 B

- 2019년도 기준 대전 지역에는 1297곳의 어린이집이 있음. 약 2년 반 만에 약 300여곳이 늘어남.
- 금년도 10월 기준, 대전 지역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음.
- 아이 1명당 교사 2명이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2018년도부터 행동관찰시스템을 도입함.
- 경계선상에 놓인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그림을 분석하여 경계선상으로 결과가 나오면 기관에 연결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임.

- 금년도부에는 상담사를 추가로 두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시간제 돌봄 정책이 있음.

- 임신포탈 육아사이트에서 등록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됨. 시간연장 프로그램도 10시 반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활성화가 필요함.

#### □ 전문가 패널 C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문제인식의 구체화가 선결되어야 함.

- 저출산·고령화 자체가 문제인지, 이로 인한 과급효과가 문제인지에 대해 명료히 해야 함.

- 구체적으로 생산력 저하나 생산인구 감소가 문제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접근일 것임.

- 단순히 저출산이나 고령화 현상 자체를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해결이 쉽지 않음.

○ 또한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논의시 저출산·고령화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인구문제 측면에서 볼 때 저출산 현상은 인구감소와 직결되지만, 고령화 현상은 직결되지 않음. 그러므로 인구문제 측면에서 논의시, 저출산·고령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고령화의 정의를 재고해 보아야 함.

- 현재의 65세는 과거의 80세 정도에 해당할 것임. 고령자를 언

제부터로 보아야 할지,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살펴보아야 함.

#### □ 전문가 패널 D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단순한 몇 개의 정책이나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음.
  - 즉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급격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우리나라 역시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 지역대학, 거점대학에서도 유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나 이들이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은 부재함. 유학생으로 본국에 있는 것과 국민이 되는 것은 장기적 방향에서 차이가 있음.
  - 이민수용에 따른 문제가 있으나, 현재 인구문제- 고령사회 부양 부담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 측면 - 와 접목하였을 때 고려가 필요함.

#### □ 시민패널 A

- 미혼인 친구에게 결혼을 권유하면, 집을 살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함.
  - 임대주택 등을 추천하면, 아이가 초·중등학교에 입학할 때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함. 향후 임대주택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결혼한 친구에게 출산을 권유하면, 남자인 경우는 출산에 따른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 여자의 경우는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는 경

우가 많음.

- 특히 여자의 경우, 전문직은 충분히 복직이 가능하나 대다수의 여성은 쉽지 않음. 개개인의 현실 상황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쉽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함.

○ 관련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함.

- 전국의 출산 장려금을 동일하게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 제고가 필요함.
  - 일례로 첫째아를 대전에서 출산하였을 때 별도의 출산 장려금이 없었으나, 둘째아를 세종에서 출산하였을 때 120만원의 출산 장려금이 있었음.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출산 장려금을 동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됨.
- 또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으면 함.
  - 현재 취득세 감면 혜택은 세 아이부터 가능한 상황임.
- 돌봄 중 잠시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 적용되는 서비스의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함.
  - 현행 관련 바우처가 있다고 하나, 이용 절차가 복잡함.
- 어린이집 인력들의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역시 마련되어야 함.
  - 그들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킬 때, 현재 불거지는 아동학대 등의 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함.

### □ 시민패널 B

- 저출산·고령화 정책이라고 하나, 가족제도에 지나치게 국한되었다고 봄.
  - 출산은 개인적 영역으로 국가가 이를 컨트롤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함. 기존 틀을 완전히 깨지 않는 이상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논의할 수 없음.
    -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접근방법이 변화해야 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음.
- 고령화 정책 역시도 기존의 틀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될 수 없음.
  -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일, 여가 생활이 모두 가능하나 현행 정책은 돌봄만을 이야기하고 있음.

### □ 시민패널 C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여성,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의 문제임.
- 젊은 여성들은 3포(抛: 연애, 결혼, 출산)가 아니라 3(非; 비혼, 비출산, 비연애)임.
  -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임. 어느 지역에 여성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출산율이 높지 않은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임.
    - 여성을 출산과 연관하여 보는 시각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함. 여성은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가 이같이 인식하고 있음.
    -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 역시 같

은 논리임. 현재의 저출산과 같은 용어는 인구정체, 인구감소의 문제를 여성에게 책임 지우는 것이기 때문임.

- 집단,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본 유구의 역사가 여성들을 출산에서 멀어지게 했다고 봄.

○ 90년대생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입인구 많고 출산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성별감별에 따른 낙태로 해당 연령 성비는 116:100임.

- 전통적 가족의 관점에서 볼 때, 남성 16명은 출산할 수 없음.

○ 아울러 성평등 하지 못한 문제, 여성을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지 않는 시각 역시 문제임. 이는 명확한 젠더문제임.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지원 뿐 아니라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가족을 만들고 세대를 만들어가는 교육이 필요함.
- 초중등 교육과 성교육 모두 철저히 평등한 방향으로 수정해야 함.

#### □ 시민패널 D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출산연령의 다변화 측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 시민패널 E

○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경제가 하나가 되어야 함.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체가 문화적으로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만 쏟아붓는다고 바뀔 수 있을지 의문임.

- 최근 매체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드라마가 등장하고 있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드라마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 인식문제라고 봄.

- 문화는 단순히 여가가 아닌 가치관임. 새롭게 앞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과 맞닿으며, 이같은 문화가 먼저 확립되어야 본격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 시민패널 F

- 신혼부부입장에서 정주의 어려움에는 주택 문제가 크게 작용함.
  - 신혼부부나 청년(1인가구)에 사회주택 등을 제공한다면, 현재 지역(대전)에서 정주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정주가 수월해지지 않을지.
- 또한 같은 청년일지라도 각자가 성장한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므로,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 모두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이 반영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임.
- 마지막으로 현재 청년층은 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 제공 창구가 어디인지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음. 주거, 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보 창구가 마련되어야 본인에게 맞는 창구를 찾아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임.

□ 시민패널 G

- 저출산 문제와 연결할 때, 청년은 N포 세대임.
  - 그 결과 보다는 원인에 집중해야 함. 왜 포기하게 되었는가.
    - 결국 청년들이 여유가 없기 때문임.
-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이 없음.
  - 또한 청년과 관련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과거와 차별성이 없음.
    - 일례로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었으나, 중소기업까지 정책의 수혜가 닿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문제임.

□ 시민패널 H

- 청년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지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젠더 관점이 무조건 포함되어야 함.
  - 대전 지역에서 여성청년들의 이탈이 많은 지역을 보면,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이 많음. 가장 기본적 욕구인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이후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제2절 충청남도

### □ 전문가 패널 A

- 80~90년대 서유럽 국가들은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교육제도, 사회보장제도, 유연탄력근무제 등 관련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음. 돌봄지원체계나 성평등 관련 서비스는 마련되지 않았으나, 보완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현상이 해소되었으며, 이를 이행의 계곡이라 칭함.
  - 그러나 한국은 유럽국가와 달리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마다 앞다퉈 지급하고 있음. 또한 여성에게 적대적인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임.
- 저출산고령화 정책 재구조화 로드맵 발표시 성평등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들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의 과제로 인식함. 우리 사회를 성찰적으로 제고한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 논의가 되고 있으나, 여성운동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임.

### □ 전문가 패널 B

-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논함에 있어 젠더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

- (생산인구) 현재 생산가능 인구는 15~64세로 논의되나, 이는 무리가 있음. 우리 사회에서 15~30세까지는 거의 생산을 못하는 연령대이나, 여전히 이 지수에 근거해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이야기 하고 있음. 지수의 재해석이 필요할 것임.
  - (소득보장) 고령사회에서 소득보장체계 강화도 중요하나, 다층소득보장 체계 마련이 더 중요함. 각 층의 소득을 현재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 보충적 소득보장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
  - (노년기 사회참여) 노인 일자리나 여가문화, 자원봉사 확대의 구체성이 부족함. 명제는 있지만 방안이 없음. 노인 일자리를 개발할 때 탐색적 실험을 통해, 남녀, 계층별로 일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노년기 요양 및 돌봄) 현재의 요양이나 돌봄서비스는 가족의 부양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을 전제로 함. 그러나 여전히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보상체계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고해 보아야 함.
  - (인식 전환)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 계속 일을 해야 노후가 안정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임. 소비를 줄이면서 여유로운 노년기를 맞이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는 없을지.
- 충청남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경우, 아직까지는 열악한 수준으로 생각됨.
- 저출산 정책은 기존의 아동 및 가족 복지정책과 차별화되어야

하고, 고령화정책은 기존의 노인복지정책과는 차별화되어야 함. 그러나 세부사업을 보면 여전히 아동 및 가족, 노인복지정책이 중첩되는 근시안적인 정책임.

- 저출산 정책은 새로운 것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면, 고령화 정책은 점차 고령화되는 노인들에게 어떻게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기존 복지정책과 오버랩 된다는 한계는 한정된 예산 하에서, 각 실/국의 성과를 내야 하는 현실에서 야기된다고 간주됨.
- (출산정책)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당사자의 욕구에 얼마나 충실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함.
  -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에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년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결혼 및 출산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염두해야 함.
- (결혼하고 싶은 환경 조성 정책)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현재 만혼화 현상 등이 나타나는 배경 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관련 정책으로 일자리 지원정책이 다수를 차지함. 결혼하고 싶지 않은 환경에는 구직이 어려운 것도 포함되겠지만, 충남지역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곧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SOC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타 도시와 비교하여 충남이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일례로 환경 정책(제대로 숨쉴 수 있는 환경

마련)과 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함.

- (노인 사회참여) 노인 여가문화시설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함. 충남 천안지역의 노인인구는 28만명에 육박하나, 노인복지관은 2곳뿐임. 또한 신노년층에게 필요한 플랫폼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충남 지역 내 자치와 분권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현장중심 서비스에 대하여 숙고해야 함.

#### □ 전문가 패널 C

○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관련하여 작년 말 저출산·고령화 정책 재구조화 로드맵을 통해 ‘성평등’이 제시되었으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는 의문임.

-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다수 있는 건 사실. 단, 정책의 재정안정성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향후 변화를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1인가구의 문제는 노인에게 집중됨. 청년층에서도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함.

- 청년 1인 가구의 다양한 인식을 결혼 측면 이외에도 폭넓게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충청남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되었다는 문제가 있음.

- 재정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특수시책이나 충남만의 것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계가 있음.

- 현재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은 아기수당, 전국 최초 24시간 보육, 공공기관 아이 돌봄 확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확대, 7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 정책 등이 있음.
- 정책 개선을 위해 민선7기 공약 외에 2006년부터 추진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충남지역 15개 시군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재분석하는 것을 제안함.
- 분석결과를 통해, 가시적 효과가 큰 지역은 어디인지와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잘 된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 전문가 패널 D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음.
-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역사가 짧고 사각지대가 넓게 포진되었기 때문임.
- 특히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76.2%, 여성독거노인은 81.3%. 이는 곧 노인빈곤 다수가 여성독거노인이라는 것을 시사함.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여성의 독립적 연금수급권 확보가 매우 중요함. 현재 임의가입제도를 시행 중이나, 가입인원은 33만명에 불과함.
-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있지만 여성 임의가입

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임.

○ 여성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

- 양적으로는 성과가 있지만 질적으로는 의문임.
  -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공익형, 시장형 일자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공익형 일자리로 저임금의 단발적인 일자리가 다수임.
  -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약 70% 이상이 여성노인인 반면, 상대적으로 질높은 시장형은 여성이 훨씬 적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남성노인에게, 저임금의 공공, 공익형 일자리는 여성노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여성노인을 위한 맞춤형 수익성 일자리 발굴 모색 필요함.

○ 특히 충청남도과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정부의 노인 일자리가 대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함.

- 그러므로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며, 농촌 여성노인은 특히 더 저하된 상황임. 일자리 창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함.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자살예방정책 역시 미흡함.

- 우리나라 노인 자살예방정책은 고위험군 선별검사나 상담서비스 강화, 게이트 키퍼 양성이 다수로 단순하거나, 보편적 정책들만 포진됨.
- 보편적 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자살예방 정책이 필요함.

- 충남 지역의 경우, 자살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생애주기별로도 노인자살율이 62.2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음.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의 자살율이 여성노인보다 3배 정도 높음. 이같은 성별차이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예방정책을 보면 성인지적 관점으로부터의 접근이 전무함.
- 일례로 충남 지역의 역점사업인 공동생활홈이 있음.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괜찮은 정책으로 평가되나, 본연의 사업 취지인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자살이나 우울감 예방 측면에서 재고해 보아야 함. 즉, 공동생활홈 사업 이후에 충남 지역의 자살율이 감소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함.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10년 넘게 진행해 온 것에 비해 노인자살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를 볼 때, 충남 지역의 공동생활홈은 현재 178개소가 운영 중이나 전체 1133명 이용자 중 여성이 절대 다수인 1086명에 달함. 노인자살율을 볼 때, 이같은 사업이 필요한 대상은 남성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노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음.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 시민패널 A

- 청년을 N포세대라고 칭하는 것에는 희망이 없고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청년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다는 측면에서 두려움이 큼.
  - 특히 여성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며, 이 중 하나로 OO군에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저출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 자체의 문제라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저출생이나 저돌봄의 용어로 바꾸어야 사용해야 할 것임.

□ 시민패널 B

- 일가정 양립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
- 성인지 관점이 자리잡기 위해, 젠더 관점의 교육을 기업 임직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시민패널 C

-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와 관련하여 충남지역에도 인생이모작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이중 노후 재설비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전략, 방향에 따라 이끌어주는 자전거 전략 등을 시도하고 있음.
  - 현재 충남 인생이모작센터에서는 은퇴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노후 재설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임.
    - 성비로는 남성 3, 여성 7의 비율 정도임.

□ 시민패널 D

- 지역의 노인, 특히 여성 노인들을 위해 마을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 여성 노인들은 자신의 삶이 없는 채로, 가족을 위해 일생을 살아옴
    - 마을 내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들이 매우 만족한

경험이 있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 □ 전문가 패널 A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 3년동안 194개 과제가 추진되었고 투입예산은 196조에 달하고 있음.
  - 수많은 정책과 예산이 들어갔지만, 합계출산율이 0.98명(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는 것이 사실임.
    - 그간 추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효과가 있는가를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단순 산식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임.
  -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로드맵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측면은 반가운 부분임. 1~2차 기본계획은 결혼한 가족, 보육에 초점을 두었고, 3차 기본계획부터는 결혼 진입장벽부터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이 제시되고 있음.
    - 특히 정책목표로 성평등 구현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투입 대비 적절한 산출을 할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됨.
- 국가의 성평등 지수는 출산율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

로 출산율에 있어서도 높은 수치를 보임.

-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경제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 저출산이 사회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저성장과 맞물리기 때문임.

- 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전략에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통계, 여성친화도시 등의 전략이 있음.
  - 제주 역시 각각의 전략에 대해 어떠한 대응하고 있는지, 성주류화 정책을 통해 제주도가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원과 점검이 필요함.

○ 제주도가 성 격차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제시되었는데, 3년 전만 해도 하위권에 머물렀음.

- 특히 가족관계나 가족의 여가가 하위권임. 그럼에도 상위권인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기 때문임. 여성이 일을 많이 하지만 가족 안에서의 의사결정참여율이나 여가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

○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일가정 양립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함.

- 일가정양립은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호혜성을 지님.

- 다만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367시간이 길고, 기업의 건강도 측면에서 대부분이 함량 미달임.
  - 제주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실태에 있어, 장시간 근로관행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 제도 도입도 중요하나, 실효성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조직문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저출산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보아야 함.
- 고령사회 위기론과 맞물려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위기론은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이 떨어짐.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목표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출산과 양육의 불안정성을 깰 수 있는 - 인구수 총량보다는 인구의 질로 정책 전환해야 함.
  - 즉, 출산총량이 아니라 부모와 아동 모두 행복한 환경에 초점을 두어야 함. 그것이 재구조화 로드맵에 제시된 삶의 질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봄.
  -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교육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성평등에 지향을 둔 변화여야 함.

#### □ 전문가 패널 B

- 저출산은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나, 고령화는 그 결과에 의한 외형적 현상임.
-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면, 결국 어느 한

쪽으로 집중되고 다른 한 쪽의 집중도는 떨어질 것임. 각각 전문적인 연구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함.

○ 정책의 패러다임, 관점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함.

- 향후 국가적 인식, 개인 행태간 괴리 해소에 관심을 두고자 함에 동의하며, 정책적 관심 역시 과감히 바꾸었으면 함.

- 인간의 삶의 기준을 생산성의 가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향, 특성 등 모든 것을 인정 및 존중하는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함.

○ 정책의 주체 역시 정책 수요자, 기업,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정책이나 제도 변화를 볼 때 이와는 동떨어진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례로 2004년부터 아동복지법이 개편되면서 제주 지역에 현재 6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후 다함께 아동돌봄센터라는 새로운 시설이 생겨남. 이용조건에 있어 지역아동센터는 소득, 가구특성에 부합해야 하는 반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용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함.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경우 나라가 오히려 낙인을 제공하는 꼴이 되어 버림. 다함께 돌봄센터가 만들어진 후, 현재는 소위 일반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 저소득층 아이가 이용하는 곳이 나누어져 버림.
- 노인 영역 역시 노인돌봄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제주 지역 역시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음. 법인의 경우, 수익구조가 맞지 않아서 내려 놓은 상황임. 그러나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개인이 아닌 법인만 진입이 가능케 함. 이것이 과연 포용적 돌봄체계인지에 대해 제고해 보아야 함.

○ 사회복지 정보의 다각화가 필요함.

- 현재 정보 플랫폼은 일방적인 제공 방식에 집중되어 있음.
  - 2010년 행복e음 시스템을 필두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나, 성북구 세 모녀 사건이 발발하는 것은 행정데이터로는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제대로 된 정책의 성과평가가 요구됨.

- 현재 시스템은 성과가 아닌 산출을 평가함.
- 진정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급액에 따른 효과 차이가 있는지(10만원 지급, 20만원 지급 등), 기초연금 지급액에 따른 효과 차이가 있는지(25만원 지급, 30만원 지급 등)를 연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는 인구구조가 양호한 편이긴 하나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주에 맞는 인구 전략과 제도를 창출해야 함.

- 제주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인구 유입률이 많아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이 수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함.
- 결혼문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인식이 아닌 변화된 문화가 반영 되었으면 함.
- 노인들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예를 들어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 등과 같이 사소한 것이지만 노인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지역 청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도움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 전문가 패널 C

- 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제대로 된 돌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 현장(양육기관)에서는 80% 이상의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음. 아이들에 대한 양육태도나 방법, 부부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예비부모 시기부터 돌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물리적 돌봄 정책보다도 정서적 돌봄에 대한 지원체계가 중요함.
    - 고된 육아라는 생각 자체를 없앨 수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미디어에 대한 홍보를 다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전문가 패널 D

- 저출산고령사회가 되면 사회복지 분야의 확대만으로 체감하는 복지를 이루기는 힘들. 보건 분야와 반드시 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같은 차원에서 제주도는 보건 예산이 현재 기준 전국 시도(타 지자체 2%내외)에서 가장 낮음.
    - 사회보장 예산을 확대할 때, 저출산고령사회가 지속될 것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보건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국가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그에 응당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signal)를 자주 제공하길 희망함.

- 사회복지 영역도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권한과 책임강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보건 영역 역시 이같은 노력이 필요함. 단 보건 영역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자치단체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임. 그러나 이는 실상과 다르며, 서비스 집행기관, 의회, 연구기관, 관련 시설들이 다양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므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한국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창립한 지 15년이 지난 상황으로 정책에 실패를 이야기 하기 보다, 향후 남은 시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

-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에 공감하며 앞으로는 삶의 질과 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 했으면 함.

- 그간 여성 중심의 지원을 이야기했다면, 아이가 직접 욕구를 말하고 그 욕구가 반영된 아동대상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함.

- 법·제도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혼인한 부부 중심의 지원을 미혼모, 미혼부까지, 낳지 않은 아이들을 낳게끔 하는 것 보다 낳아있는 아이를 잘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제도권 외의 아이들에게도 지원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함.

- 제주 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해서 사회보장예산 중 노인 분야 예산이 여성 분야보다 비중이 낮음.
  - 2019년 기준 9개 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타 지역은 노인 예산 비중이 30%. 제주도는 여성/보육 관련 예산이 이 30%, 노인 관련 예산이 24~25%임.
  - 제주도의 노인인구가 전국 평균수준이라 하지만, 읍면지역이나 일부 동지역은 20% 이상임.
  - 내년부터 노인 세대에 포함될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하여, 전·후기 노인을 구분하여 고령화 대책은 후기노인은 돌봄과 문화여가에, 전기노인은 소득보장, 실버산업에 투입 및 집중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 와 같이 구분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 시민패널 A

-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일관적 정책보다 지역실정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그렇다면 보건정책, 저출산 정책, 고령 정책 역시 지방분권화시킬 것은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예산 편성, 실행을 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임.
- 노인복지 사업 관련하여 제주 00지역에서 경로당 활성화 시범 사업을 금년도부터 9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시작함.
  - 당초 계획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일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임.

- 제주 지역의 노인들 역시 하나의 문화권 내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상이하며, 연령대 역시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에서 일괄적 운영은 적절치 않음.
  -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사회복지사를 투입하거나, 경로당 간 통합운영을 하는 방안보다 일본과 같이 케어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했으면 함.
  - 간호사나 영양사를 투입하여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함.
  - 독거노인이 경로당을 많이 찾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자택으로 복귀하였을 때 돌봐줄 인력이 부재함. 경로당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독거노인의 돌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즉,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자체를 경로당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제공할 때 실질적인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을 듯함.
- 어르신 모니터링 운영단이 활성화 될 때,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사실상 지역 실정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분들이므로, 일정시간 교육을 하는 등 전문화 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제주의 노인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주 지역의 노인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확대가 필요함.
- 현재는 노인장수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국 차원으로 확대편성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함.

## 제4절 울산광역시

### □ 전문가 패널 A

-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지역은 이를 따라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성을 제공해야 하나 예산이나 실행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지방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이 내려오기보다는 지방의 많은 정책들을 중앙이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고령사회로의 이동과 관련한 문제점은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좌절감'임.
  - 노인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연령기준 역시 확대 되어야 함.

### □ 전문가 패널 B

-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경우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이 거의 없음.
- 국가 전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원인은 주거, 교육,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중 교육이 가장 중요함.
  -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만으로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매우 많이 드는 상황임. 교육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교육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지역 전체의 인구울 측면에서, 유동 인구 정책을 많이 펼쳐야 함.

- 울산 지역 역시 주거문제 등으로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많이 발생함.
- 울산시의 특성인 관광도시, 도농복합 도시의 측면을 내세어 유입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농촌 지역의 정주 안정화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함.

#### □ 전문가 패널 C

- 울산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면, 타 지역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높은 편임.
  - 반면 60세 이상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어, 일자리 문제에 대해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함.
    - 그러나 실상 여성들은 음식업이나 숙박업 등의 서비스업, 일용직 등이 대다수이며, 청년들도 제조업 내 임시·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상황임. 즉 현재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님을 시사함.
  - 즉, 여성은 물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청년의 창업보다는 신사업 부분의 산업을 육성해야 함.
- 이외 지역의 건강권(헬스케어)이 부족하며, 정보의 유통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 전문가 패널 D

-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지나치게 장기적인 정책으로,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울산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10년 전과 비교시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임. 지역 내 노인인구 증가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을 구분할 수 있음.
  - (국가) 연금 제도를 탄탄히 해야 할 것이며,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 노인 개개인의 고령사회에 대한 교육-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사회 내에서 보다 생산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안 등 - 이 필요함.
- 고령사회 정책은 노인들의 욕구가 각기 다르다는 측면에서 일자리와 여가 생활 역시도 다각도로 보아야 함.
  - 노인인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일자리 확보라고 볼 때, 울산 지역은 여러 정책을 시행하긴 하나 베이비부머의 노년층 진입을 고려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고려가 필요함.

#### □ 전문가 패널 E

- 늦게 출발한 감이 있으나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함. 아울러 출산이나 양육의 문제는 복지나 노동정책의 확대와 맞물려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가족이나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해서 울산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임.
    - 가족, 일가정 양립, 노동 등의 측면에서 여성의 위치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같은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이 울산지역과 잘 부합한다고 판단됨.
- 저출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보편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출산 장려금 자체의 효과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다수 지역에서 도입되어 활발히 지원되고 있음. 이보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을 역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됨.

#### □ 시민패널 A

- 저출산이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는 여성에 대한 책임 전가를 지양해야 하며, 저출생의 용어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저출생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기업이나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 등 각각의 차원이 다름.
  - 국가 차원 역시도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간 관계가 언급되어야 함.
  - 지자체 측면에서는 출생을 준비하면서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 지원금 역시 턱없이 부족하며, 출산 장려금보다는 수당(배당)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이 유행하고 있으나 청년들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되지 않음.
  - L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등에 입주할 기회함.
    -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좋지만 아이와 같이 살기에는 실 거주면적이 너무 작음. 또한 행복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

어, 아이들조차도 평수와 마감재 등으로 서로에 대한 급수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이같이 실효성 없는 재생사업들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임.

○ 청년이 중년, 장년, 노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세대와만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음.

-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고, 기성세대가 지닌 부를 청년들에게 나누는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 선배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청년들에게 나눠준 사례가 존재함. 이처럼 부의 재분배가 필요함.
- 또한 지역의 청년들과 노인들을 결합하여 3인 이상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함. 지정 공모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외, 울산지역에 맞는 소득수준(중위소득)을 제고해 보아야 함.

#### □ 시민패널 B

○ 결혼부터 자녀 출산, 양육, 자녀의 자립까지 하나의 연속적 과정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의 계획이 추진되어야 함.

○ 현재 노인복지관에 등록하는 노인들의 인식 역시 많이 변화하여,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복지관 이용을 마땅히 누릴 권리로 생각함.

- 복지관에서의 활동 역시 일차적 욕구에서 봉사활동, 일자리 연

계 등과 같이 보다 고차원적 욕구로 진화함.

-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
  - 공공일자리와 같은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참여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한계가 있음.
  - 소득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노인이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시민패널 C

-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나 집값에 대한 걱정, 비정규직 등과 같은 고용불안, 육아 자체에 대한 어려움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육아에 대한 교육, 청년세대의 높은 자아실현 의지, 육아휴직 후 복직경험의 양극화(육아휴직을 하면서 월급을 모두 받는 경우와 복직 후 해고로 이어지거나 재취업 시장에서의 불리한 경험의 대비), 성범죄 등 학교폭력 등의 범죄 등이 있을 수 있음.
-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현 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를 보고 모델링을 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즉 국가정책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청년들이 자신의 윗 세대를 보며 제대로 모델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함.

□ 시민패널 D

- 일부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음.
  - 노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민패널 E

-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좋다는 선택지가 되면 아이를 낳을 것 같으나, 현재 정책이나 현실이 그렇지 않음.
  -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굳이 낳고 싶지 않음. 또한 지금 세대는 돈을 벌어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거주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어렵다고 판단됨.

## 제5절 경상남도

□ 전문가 패널 A

- 저출산 정책 대부분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아닌 양육 및 돌봄지원에 치중되어 있음.
- 저출산 시대의 경우 패러다임의 변환이 가장 시급함. 사회적으로 지닌 정상성 문화를 탈피해야함.
  - 정상, 성공, 생존 등에 갇혀 있음.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함.

- 경남 지역 청년들의 경우, 문화에 대한 욕구가 큼.
  - 어떠한 문화를 필요로 하는지는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경남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관(官)중심의 폐쇄된 모습은 적절치 않음.
-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의 현금지원 정책은 시·군지역은 현재의 방향으로 가되 복지서비스와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고령사회 대책과는 거리가 있으나, 아동수당의 경우 비판적 시선이 필요함.

#### □ 전문가 패널 B

-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 출산억제 정책이 모토였음.
  - 이후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변경됨.
    - 단, 출산장려 정책의 초점이 잘못 맞춰짐. 현재와 같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치관 변화는 존재감이 없으며, 출산장려 캠페인 수준으로 보임.
- 스웨덴과 프랑스가 출산율 반등을 보이는 계기는 사회적 합의가 바뀌었기 때문임.
  - 프랑스는 특정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출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조정됨.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을 하면 퇴직을 해야 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자할지라도 출산율이 반등할 수 없음. 사회운동 수준의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음. 경남 지역 00군의 경우 여전히 출산장려금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사교육(학원)을 이용하는 것 외에 별도의 양육방안이 없음.
  - 시군구청에 공공보육을 담당하는 곳이 없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출산율의 반등은 요원함.
-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저출산 정책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고령사회의 문제가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가 나오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대응은 빠르지 못함.
    - 100세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이후 40년을 그저 버티는 방법밖에는 없음.
  -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실토가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노인 교육, 사회참여 정책 등이 맞물려 수행되어야 함.
- 전반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함.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함.
  - 경남 지역에서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시범서비스라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 유사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관계부처 협업시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이나,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정책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질 듯함.

- 이외 고령친화도시, 건강도시, 청소년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등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통된 사항은 같이 운영하되 다른 사항은 각자 주관하는 형태로의 운영이 필요함.

#### □ 전문가 패널 C

-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 현황을 논함에 있어 양적변화에 중심을 두어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적 변화에 중심을 두어야 함.
    -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 분석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음.
    -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65세 ~ 84세는 전기 노인, 85세 이상은 후기 노인으로 양적, 질적 특성이 다르므로 이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정책의 운용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측면은 좋은 방향으로 보임.
  - 단 이같은 패러다임이 실제로 현실화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 특히 지역단위(시·군)의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며, 지역 또한 파급효과를 느낄 수 있기 있는 계획들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해결되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권역별로 수행가능한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나아가 인구 감소 대응이 아닌 적응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화되어

야 하며,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같이 지역공동체에 의한 비  
공식적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마련되어야 함.

□ 전문가 패널 D

- 1인 가구가 가족의 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1  
인 가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자 함.
  - 독거노인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포함하여 전 세대를 아우  
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여성의 고용률은 출산율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남성만이 부양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전환  
이 필요함.

□ 시민 패널 A

- 청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그들의  
가치관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면 함.
  - 기성세대는 집을 재산 증식이나 부동산 수단으로 간주하지만,  
청년들은 주거 문제로 인식함.
  - 일자리 역시도 청년들은 내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함.

□ 시민 패널 B

-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주거가 안정되며, 다른 부분들 역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함.

- 현재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감이 높음.
-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청년들의 경우, 급여가 높은 직장보다는 적당한 일과 그에 따른 적당한 보수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많음. 이 같은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 □ 시민 패널 C

- 사회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출산을 안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하고 있음.
  - 비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안정감의 부재가 첫 번째 원인일 수 있음.
    -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간 차이를 극복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움.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음.
  - 또한 여성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출산을 어렵게 함.
    - 여성에게 경제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을 모두 요구하지만, 어느 한 가지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임. 채용 불리, 임금 차이,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지 않아 여성들이 매우 힘든 상황임. 가정 내에서도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전통적인 역할상에 불만을 가지는 상황임.

- 기존 정책 기조는 전통적 가족구조 하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음.
  - 미시적 정책이 아닌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제시되는 정책들로는 청년들이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 출산을 한다고 할 때, 출산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삶의 질도 중요함. 출산, 양육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다만 현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구들은 단순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선에서 그침.
  -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청년세대들에게 어떻게 이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시민 패널 D

-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반영하여,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스스로 출산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출산장려를 위해 부부가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세분화 되어야 함.
    - 차상위, 경계선, 복지 사각지대의 가정들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난임, 고위험군 임신부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인공수정, 시험관 수정시 본인부담이 크므로 지원 폭을 확대

해야함.

- 어린이집 하원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야간 보육시설과 직장 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며, 보육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 시민 패널 E

- 경남에서 추가적으로 인구를 늘리자(출생 측면)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접근으로 생각되며, 밀집된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되어 제대로 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연령층에 부합한 다양한 정보접근 기회가 확충되어야함.
  - 내일배움카드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고령의 농업인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혜택이 없음.
- 경남 지역의 경우, 소멸 위험 지역은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노인 세대가 거주함.
  - 이같은 상황을 볼 때, 1·2차 산업간 연계가 필요함.
    - 1차 산업의 산물들을 2차 산업에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함.

#### □ 시민 패널 F

-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채용방식이라고 생각하나, 이에 대해서는 잘 언급되지 않고 있음.
  - 개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채용방식에서 저출산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시민 패널 G

- 출산장려보다는 삶의 질 개선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전환이 필요함.
- 그러나 담당(주무)이 자주 변경되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음.
  - 중앙정부의 사업이 세분화되어 지역으로 넘어오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 그침.
  - 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어 사업을 오랫동안 수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듯함.

제6절 부산광역시

□ 전문가 패널 A

- 환경은 집 안 및 집 밖의 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집 밖의 환경은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하나 집 안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어려움.
- 부산시는 지형적 특성상 산이 많고 경사가 가파름. 이를 고려하여 고령사회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노인의 경우 주거 개조가 필요한 이유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함임.
  - 노인이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 시, 원활한 신체활동에 지장을 주게 됨.
  - 낙상은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50%를 차지함. 대부분

의 노인이 집 안에서 생활하고, 특히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며  
이사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주택 개조시의 기대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낙상을 예방한다는 것,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낙상 예방이 가능한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주택의 문제가 개선되는 에너지  
효율 측면의 이점이 있음.
  - 그러므로 서비스 연계형 주택, 노인친화적 주택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노인친화적 주택에 대한  
내용이 있음. 중요한 것은 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임.
- 주거환경 관련 정책이 시급한 것은, 부산시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 장·단기적 전략을 구분하여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 전략으로는 현황 분석이 긴요함.
    - 우리나라 노인들이 현재 어떤 주택에 거주하며, 그들이 활용  
가능한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함.
    -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  
등 노인의 상황은 매우 다양함.
    - 부산시의 고령화 현상은 전국 기준 대비 4년이 빠르기 때문  
에 전략 수립이 더욱 시급함.

- 장기적 전략으로는 첫째, 그간의 주택이 청년 중심으로 지어졌다면 향후 모든 건물이 노인을 기준으로 지어져야 할 것임.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임. 둘째, 주택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함.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음. 셋째,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주자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복지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물리적 환경이 완성이 되어야 주거정책이 마련될 것임.

#### □ 전문가 패널 B

- 국가 정책에 따라서 개인에게 출산을 권하거나 권하지 않는 것 개인에게 매우 억압적인 것임.
  - 출산을 국가가 장려한다고 될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물임.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개인이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게 될 것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을 존중해야 함.
- 과거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이 비난,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정부의 관점이 변화된 것은 매우 잘된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지방은 여전히 관점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개인의 삶의 질,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용어의 변화가 필요함. 특히 가임여성과 같은 용어는 지양해야 함.
- 대상을 통합한 돌봄 정책이 필요함.
  - 사회 갈등이 심한 현재,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수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간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돌봄 친화적 정책, 돌봄 친화적 도시라고 하면 이는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해야 함.

○ 부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었으나 이를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음.

- 부산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부르지만,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없음. 추가적인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중앙정부에서 기본정책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화된, 창의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 수준에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을 수행하느라 자체적인 정책을 수행해 나갈 여력이 없음.

#### □ 전문가 패널 C

○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왜 청년들이 말을 안 듣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청년 세대는 현 정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임.

- 현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의 삶에 효율적이지 않은 것임.

○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치관·정책도 변화해야 함.

-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의 삶에 과업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국가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결혼

과 출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문가 패널 D

- 일본의 고령화율은 28.4%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문제가 훨씬 심각함.
  - 일본은 오래 전부터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이나 홈헬퍼 서비스 등과 같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펼쳤음.
  - 개호보험은 1997년에 논의가 되어 2000년에 시행되었는데, 자립이 가능한 노인들은 등급신청을 잘 하지 않았음.
  - 이후 정책의 효과성 파악을 위해 노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노인들이 더 많은 질병을 지니고 그 상태 역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곧 집에만 있게 되면서 경증 치매증상을 나타냄.
- 지자체의 재정 자립이 필요함.
  - 일본은 지방분권화가 시작되면서 재정도 분권화되었음.
  - 따라서 의료보험, 개호보험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함.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중앙정부로 가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분할하는 방식에 해당함. 예산 관련 문제로 인해 예방 서비스를 하고싶어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자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령 케어가 필요함.
  - 부산시의 경우 전쟁 후 임시로 머무르다 정착한 경우가 많음.
  - 재정적인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하다 보니, 고령자가 된

시점에 충분히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이 많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간병비 등의 사회적 비용이 타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아울러 지역 내 계단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과 비교시 관절이나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날 것임. 기관과 시설의 접근성 문제를 고려하여, 부산시에 맞는 서비스- 예방적 차원의 복지를 전개해야 함.

#### □ 전문가 패널 E

- 부산시의 고령친화 정책이 필요함.
  -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정책.
  - 각 세대마다 생활 패턴과 가치관이 다르므로 세대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함. 자긍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 시민 패널 A

- ‘보편적 복지’와 ‘서비스의 질’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함.
  - 국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데, 현장에서는 서비스 제공 인력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케이스를 늘릴 경우 양질의 인력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단계별로 케이스 수를 조정한다면 현장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없이 성급히 실시하게 되면서, 현장(노인

돌봄분야)에서 많은 혼란을 겪음.

- 많은 사업을 나열하는 것은 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큰 혼란을 주며,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저하됨.
- 정책의 양적 팽창도 중요하나, 양과 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현장에서는 돌봄 인력과 관련한 문제 역시 발생함.

- 현재 현장 종사자는 5060세대로, 젊은 세대는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 등의 이유로 요양시설에는 오지 않음.
- 5060세대가 돌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이 정년을 맞이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 이용자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만 현장의 여건은 그렇지 못함.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켜 젊은 인력이 종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며 인력-이중 특히 젊은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부산시에는 ADL(일상생활수행능력)은 괜찮지만 만성질환을 2~3개씩 지닌 노인들- 특히 여성 노인- 이 많음.

-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느끼는 노인들의 비율이 높고, 부부 중 한 명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 시 남은 자의 돌봄이나 부양 문제가 발생함.

○ 빈곤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신체적 여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서비스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 제조업 비율은 낮은 상황으로, 제조업으로 유명한 주변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에 위기감을 가지게 됨.

#### □ 시민 패널 B

- 노인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및 부산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응급안전 알림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이외 노인의 편의업무(은행이용, 기본 생활 지원 등)가 제대로 지원되었으면 함.

#### □ 시민 패널 C

- 출산 기피에 있어 육아 부담이 많은 비율을 차지함.
  - 맞벌이 집안의 경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
  - 보육시설 역시도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야 하므로 영유아의 상황을 배려할 수 없음. 가정돌봄은 아직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함.

#### □ 시민 패널 D

- 부산시의 기본계획 중 고령사회 관련 사항은 후순위에 위치함.
  -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아젠다가 형

성되어야 함.

-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 혹은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거나, 신중년과 관련한 시설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매칭 사업은 지방의 자생력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실천하기 어려움.

□ 시민 패널 E

- 노인의 대체 용어가 필요함.
  - 노인은 평균 수명을 다 하고 그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임.
- 노인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지하철로 출퇴근 시 노인들을 위한 전용칸을 할당했으면 함.
- 정보화 - 스마트폰 교육 - 교육과 같은 복지 서비스가 자원봉사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로당과 같은 공간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음. 강화가 필요함.

□ 시민 패널 F

- 부분적으로라도 기본소득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시민 패널 G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과 동시에 개인의 삶이 종료된다는 인식이 있음.
  - 특히 여성들을 출산을 하는 순간 사회적 생명이 끝난다는 인식

이 있음. 특히 부산의 경우 일할 곳이 없어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많음.

- 각 계층이 서로를 혐오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젊은 세대는 노인들을 무작정 혐오하는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함.

#### □ 시민 패널 H

- 부산은 교통이 어려움.
  -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러 오기가 어려움. 이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함.

#### □ 시민 패널 I

- 저출산과 고령화가 왜 연동되어야 하는지 의문임.
- 노인 일자리는 대체로 후기 노인이 참여하는데,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중에 적합한 노인이 거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는 일자리에 관한 부분만 만들어짐.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복지 측면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일자리가 아닌 노인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확대되어야 함.

## 제7절 강원도

### □ 전문가 패널 A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함.
  - 본 해결을 위해 강원도, 도 교육청이 힘을 합쳤음. 부처간 벽을 넘거나 서로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게 쉽지 않았는데, 강원도와 교육청이 힘을 함께 합쳤다는 것이 의의가 있음.
- 초등 돌봄에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함.
  - 방학 중에는 아이들 방치 사례가 많고, 부모들의 아동 급식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임.
    - 현재 3개 중앙부처에서 수행 중인 돌봄 중 5가지 유형이 추진되며, 관내 돌봄 수용률은 전체 아동수의 18.8%임. 맞벌이 가정 아동 수의 38.4%에 그침. 그만큼 사각지대가 여러 군데 뚫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초등 돌봄 수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특히 춘천, 원주, 강릉시의 수용률은 굉장히 낮은 편. 태백, 속초, 양구, 철원 역시도 낮음. 향후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강원도는 4가지 방향으로 가야 함.
  - 첫째, 강원형 돌봄시범학교 추진이 필요함. 강원도와 교육청이 함께 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지자체 직영 학교내 돌봄센터 시범학교 추진이 필요함.
  - 둘째, 강원도 추진 다함께 돌봄센터를 강원도 전역에 확대해야 함. 현재는 13개가 있으나 2022년까지 51개로 확대해야 함.
    - 지역아동센터 아동 정원 및 종사자 배치기준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 돌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역할을 강화. 지자체, 교육청,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이 필요
- 이중 강원형 돌봄시범학교는 강원도와 교육청이 서울 중구청 흥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시사점을 도출
- 2020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려고 하며, 강원도에서 돌봄사업팀을 만들어서 숙련된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이외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업무조정이 필요함.

- 돌봄업무를 1개 부처에서 통합운영이 필요함.
- 또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육아시간 1일 2시간 활용, 생활 복지사 확대를 통해 강원도의 초등돌봄 부족 실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전문가 패널 B

○ 강원도는 고령화 되고 있음.

- 노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인구는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임. 젊은 강원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함.

○ 청년의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그간 많이 개선되어서 전국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그러나 청년층에서 심각한 것은 청년의 지역정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도내 대학 진학률이나 대학 졸업 후 도내 정착 비율이 전국 최하위임.

- 강원도에서 태어난 청년, 강원도에서 배움을 한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부분을 고민해야 함.

- 강원도에 대한 제안으로 청년 정책을 고민해 볼 때,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음.
  - 취업자료를 찾고자 했으나, 실제 강원도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서 실태조사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있음.
  - 강원도에서 청년층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도와 시, 민간기관들이 분산되어 진행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
    - 강원도 전체를 취합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 공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
- 강원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자체와 기업과 학교, 특히 대학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 연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청년 창업문제 역시 강원도는 낮은 수준.
  - 창업을 하더라도 1인 창업수준, 통신판매나 음식업에 국한됨.
    -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 한다면, 은퇴자를 활용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 기타 정책으로는 정보 제공, 그들을 위한 일자리 개발, 일자리 개발자의 양성이 필요함.
- 대정부 제안으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나,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분산하여 수행하므로 어려움이 있음.
    -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청년청과 같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활용가능한 정책들의 소통과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함.
  - 강원도가 여러 시도를 하지만 재정이 어려움. 국비보조율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음.
  - 시도간 복지격차가 있으므로, 강원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보편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희망함.
    - 강원도 역시 청년배당 등에 의지가 있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원주 지역혁신도시 인재채용 역시, 단순사무나 서비스에 치중된 경향. 지역 전문인력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채용목표가 제고될 필요가 있음. 청년을 일 뿐만 아니라 이 곳에서의 생활이 가능토록 해야 함. 그러한 측면에서 청년 주거지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
- 종합할 때, 젊은 강원도를 위해 소통 창구 일원화, 실태조사, 정부 지원 방안 확대, 국비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싶음.

#### □ 전문가 패널 C

- 저출산고령화, 인구 관련된 정책들은 노인, 아동,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이 집단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수립되었

있음.

- 이에 반해서 신중년이라는 인구집단은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음. 그간 이 집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책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임.
- 강원도는 신중년 비율이 25.3%로 높은 비율. 이 집단들은 노인세대, 65세 이상과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님.
  - 이들은 이전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음. 아울러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온 집단이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 또한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신중년 세대의 경우,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니고 있고, 자녀 부양도 포용해야 하는 끼인 세대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강원도 정책은 기존 정책인 사회공헌 활동 지원에 국한되어 있음. 교통비와 식비만 지원되며 9천원 정도로 일자리 보다는 봉사의 의미가 강함. 경력활동지원 사업으로 숲해설사, 문화해설사 등이 있으나, 도내 6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음. 즉 신중년이 도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관련 정책은 부족함을 알 수 있음. 내년도에 신중년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특성, 욕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지원체계를 처음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신중년 일자리를 고려할 때, 생계형 일자리를 보급할지 혹은 적정한 소득을 제공하면서 사회공헌, 성취감을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함.

- 단순히 기존 봉사개념의 일자리는 신중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님.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측면이 있음.
  - 이와 함께 기존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함.
- 또한 제2, 제3의 삶을 설계함에 있어 신중년의 복지나 의식주, 건강 등을 같이 살피는 것이 중요함.
-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차원의 접근도 요구되며,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복지적 접근 역시 필요함.
- 대정부 제언으로 신중년과 관련한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할 것인지, 복지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함.
- 특히 지자체마다 신중년을 바라보는 연령이 다름.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 주어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임.

#### □ 전문가 패널 D

-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 뿐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험까지 있는 단계임.
- 현재 강원도에 188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 지역에 90%가 현재 소멸단계에 진입한 상태임.
  - 그럼에도 현재 인구는 150만명을 유지하고 있어, 도민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저출산 현상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저출산이 지속될 것임.

- 20~39세의 지역 유출이 많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유입되고 있음. 도 차원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인구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책들이 전개되어야 함.
    - 인구구조가 극히 열악한 지역(경북, 전북, 전남 등)에 대한 특별 대책, 그 안에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심도있게 다루져야 함.
  - 현재의 위기는 20~3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전 계층의 인구교육도 중요함.
- 차년도 4차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지, 즉 지역을 살리는 지역 중심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임.
- 강원도 역시도 지역 살리기, 출산율 제고 정책을 많이 강구하나, 중앙정부에서 이를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 있음.
    - 수도권 규제 완화 뿐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과 협의없이 관련 정책들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 아울러 일본과 같이 고향세를 도입하여 재정 열악지역에서 저출산이나 의료, 복지, 교육 문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위원회나 복지부가 노력해 주었으면 함.
-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통해, 행복 달성이나 삶의 질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음. 그러나 지방에서는 합계출산율이라는 목표치가 거론되지 않으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출산정책을 펼쳐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함.

□ 시민 패널 A

- 가족 경험에서부터 결혼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지만, 현재는 그 기대가 높지 않음.
  - 부모세대가 고민해야 할 문제임. 도 내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들이 주체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 주길 희망함.

□ 시민 패널 B

- 노인이 행복한 강원도가 되어야 함.
  -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는 좋지만, 지속성이 없으며 활동 공간이 조립식 건물과 같이 열악함. 이같은 환경들이 제대로 제공되어야 노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돌봄도 같이 될 수 있을 것임.

□ 시민 패널 C

-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생애주기의 인식개선이 중요함.
  - 선택,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자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함.
- 인구정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최근 성교육을 많이 진행함. 미래지향적이고, 성평등적 내용을 담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차츰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시민 패널 D

- 정부의 출산지원금이 가계 생계에 큰 도움으로 작용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님.
  - 과거에는 마을 차원에서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음.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것이 개인화되어 육아 역시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다 보니, 정신적 외로움과 체력적 부담이 강함.
    - 특히 육아 중 가장 힘든 오후 5~8시 시간대에 돌보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음.
- 현대 우리 사회에서 대가족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함.
  - 다양한 방식으로 매체 활용방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함.

□ 시민 패널 E

- 강원도 OO에는 산후조리원이 많지 않음.
  - 특정 병원에서만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고 그 외에 2곳이 더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이용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OO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많이 생기길 희망함.

□ 시민 패널 F

- 우리나라가 3차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등 많은 시간을 지

나왔는데도 일선 시군의 업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대처가 갑갑함.

-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면 과감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기초 시군구는 이를 새로운 재정부담으로 인식하게 됨.
- 예를 들어 사업을 하나 만들게 되면, 도비 20, 시비 80 수준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함.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기초 지자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식함.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이같은 부분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집행,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가졌으면 함.
- 기초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30%가 사회복지비용으로 들어가나, 이마저도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게 대다수.
-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비 20%, 시비 80%가 아니라 과감하게 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편성을 해야 함.
- 도내 00시 저출산 담당팀이 있으나, 예산이 없음.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함. 우리나라 예산 490조 중에서 복지부가 71조를 차지하지만, 저출산이라고 확실히 칭해지는 예산이 없음.

#### □ 시민 패널 G

- 강원도에는 작은 학교가 많은데, 이것을 문제라고 하여 학생수 늘리기에 포커스를 둔 여러 정책을 쏟아 부었음.
-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출산율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 학생수가 2000명인 학교와 60명인 학교, 어느 학교가 더 교육이 잘 되겠는가. 강원도가 오히려 교육에 좋은 지역일 수 있음. 현재까지의 기본적 전제가 바뀔 필요가 있음. 위기가 아니고 더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부분에서 말하고 싶음.
- 과거를 기반으로, 기존의 마을공동체와 같은 정책들이 마치 이상적 형태였던 것처럼 보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봄.
- 당연한 것에 대해 호들갑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며 과거를 미화시키지 않았으면 함.
- 현재의 사회에서 긍정적 요소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이같은 것들을 구체화하여 통합조직과 예산을 만들어야 할 것임.
- 각 부처에서 쏟아붓는 돈을 통합하면 예산이 없지 않을 듯 함. 통합조직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있어서도 필요함.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통합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토대가 국민 각자의 행복에 있어야 함.

## 제8절 경상북도

### □ 전문가 패널 A

- 정부의 인구정책이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나라 전체의 인구를 목표로 두다 보니, 이제까지 국가 안에서의 지역간 이동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음.

- 지방의 인구대책에 있어서는 출산 문제도 있으나, 지역간 이동 문제가 더 큰 문제임.
  - 작년 기준으로 경북인구는 15,000명이 줄어듦. 출산율로 인한 자연 감소 6천명, 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이보다 더 많은 9천명임.
  - 지방의 정책은 저출산과 아울러서 역 유출을 막는 - 나라로 보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때에는 지역간 이동문제에 대한 부분도 담겼으면 함.
- 인구분산 정책을 실시하다 보면, 인구의 공급 측면에서 저출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통계 수치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 합계출산율을 보면 - 가장 높은 세종은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고 - 전남, 제주, 충북, 경북 등 도 단위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 부산, 인천, 경기임.
  - 청년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출산은 곧 문화적 문제,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임.
  - 대도시에서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같은 것들이 무너지다 보니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봄.
  - 인구분산 정책을 세우면 지역간 편차도 줄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의 출산율도 높이는 것이 아닐지,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함.
- 다른 하나는 저출산 대책 관련 문제로, 돌봄, 양육에 있어서는 오

히려 정원충족율이 낮은 문제가 있음.

-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시책을 하다 보니, 도시와 농촌의 다른 사정이 반영되지 않음.

- 농촌의 경우에는 돌봄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시장이 전혀 없음. 그러다 보니 아이들 이동권이 문제가 됨.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돌봄터에도 갈 수 있는데 이같은 것이 어려움.
- 도회지, 경북의 구미지역만 하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학 경쟁이 치열함. 이같은 측면을 볼 때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적어도 도시, 농촌 간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경상북도의 경우, 1년 동안 저출생 극복 TF(Task Force)를 가동함. 내년에는 예산의 최우선을 저출생 극복, 그 다음 일자리 순으로 편성함. 이외 여러 가지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임.

- 청년이 결혼 앞둔 시점에서 가장 문제를 일자리, 주거문제라고 간주하여 이에 대한 정책을 제공할 예정임. 내년 처음으로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할 예정임(약 56억원 편성). 3년간 부부합산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면, 3년간 1억에 대해 3%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임. 아이를 낳으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함께 설계하였음.

○ 아이를 낳으면 돌봄 문제가 있는데, 시설을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동서비스가 많이 필요함.

- 현재 돌보미 지원서비스 이용시 많게는 시간당 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는데, 내년에는 1/2로 낮추고자 함. 자부담 경감을 통해 돌봄 관련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봄.

- 나아가 다함께 돌봄터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소방서에서도 119 긴급돌봄터를 마련할 것임. 예를 들어 갑자기 부모가 나가야 하는 상황에, 소방센터나 119 안전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예정임. 시범사업 효과가 보고되면, 전 119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여러 가지 결혼형태별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음.

- 내년부터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에 대해서도, 약 5백만원 정도의 월세지원금을 도입할 예정임.

○ 일자리 정책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경북도가 비교적 열심히 수행하고 있음.

- 청년의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전국 평균과 비교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북이 모델이 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월급받는 청년 농부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더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하여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음.

#### □ 전문가 패널 B

- 경상북도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우리도 노인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15.7% 증가하였음.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복지건강국의 경우 우리도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함.

-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의 14.9%이며, 복지 건강국 내에서는 46.4%를 차지함. 규모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원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사업의 방향을 보면, 1) 생활지원 강화 2) 안전 및 보건 증진 3) 노인복지시설 증진으로 나눌 수 있음. 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노후 생활지원 강화에(91.2%)에 투입되며, 시설증진 5.6%, 안전 및 보건증진이 2.8%로 나타남.
  - 경북도의 노인복지사업은 총 67개가 있으며, 국고보조, 순수 도비나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됨. 그 구성을 보면 국고보조 사업이 71.6%, 순수 도비 사업이 7.1%, 시군비 매칭 사업이 21.3%임. 다시 말해 국비에 의존해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 인구에 있어서 현재 경북 지역의 독거노인은 21.1%를 차지함.
  - 구미, 포항, 칠곡 지역을 제외하고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여성들이 많음. 특히 독거 여성노인의 경우, 복지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국비를 매칭하여 진행되는 도 내 노인사업은 노인 일자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학대 피해쉼터, 기초연금이나 노인보호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포함됨. 이외 경로당 지원, 노인돌봄종합 및 기본서비스, 시설 기능보강 사업들이 포함됨.
  - 이외 나머지는 도비나 시군비 매칭을 하여 진행함.
    -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웃사촌 행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음. 행복도우미를 발굴하여 경로당을 지원하도록 허브, 거버넌스를 만듦. 돌봄의 욕구가 증가하므로 향후 더 많은 서

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기본적,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정부의 사업 이외, 지역에서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지역의 특성에 맞고 노인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맞물려 운영하고자 함.

- 내년에는 노인통합돌봄서비스가 수행될 예정. 경북에 맞는 기본, 종합 돌봄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 전문가 패널 C

○ 농촌 공동체의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마을사업 혹은 공동체 활동가들을 많이 만나고 있음.

- 공동체 사업을 하기 시작한 연유를 물어보면, 본인의 아이를 함께 잘 돌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많음.

• 그러나 돌봄을 함께 하기 위해 시작했다가 활동가들은 아무런 보상체계가 없는 것 등에서 많이 지쳐함.

○ 경북 지역은 대부분 농촌으로, 아이들의 돌봄과 관련하여 이동권 문제는 당장 당면한 위기임.

-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아이를 안 낳는다고 의견이 많음. 특히 농촌은 돌봄 커뮤니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임.

• 칠곡 지역의 경우, 현장 활동가들이 스스로 교사가 되서 마을 안에서, 재능을 가진 분들을 활성화하여 운영 중임.

- 지원을 약간만 활성화하면 경북 지역의 경우, 아동의 이동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마을 내에서 돌봄, 교수 학습도 가능할 것임.

- 마을의 돌봄이나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협업을 진행했으면 함.

○ 둘째아를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함.

- 주변을 보면, 첫째아를 낳고 둘째아를 낳는 것에서 많이 힘들어 함. 오히려 셋째아를 출산하는 것은 쉽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둘째아를 낳을 수 있는 지원책들이 있었으면 함.

- 현재 셋째아, 넷째아에 다자녀 정책지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같은 정책을 첫째아나 둘째아부터 고려했으면 함.

□ 전문가 패널 D

○ 청년들은 주거문제가 제일 큰데,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이 연령대에 돈을 모아 집을 사기 힘들.

-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가 많이 있으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급 활성화가 부족함.

- 현재 10평 남짓한 집들이 정부를 통해 공급되나, 이 경우 아이를 낳으면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대출한도에 있어서 역시 정책의 한계를 체감함.

○ 또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수정이 이루어졌으면 함. 현 제도는 제도 운영 기간 내 수정에 실패하더라도, 차감 횟수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같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함.

□ 전문가 패널 E

○ 경북도는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며 성평등 인식도 매우 낮음.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는 다른 결이 있음.

- 경북지역 청년들에게 저출생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을 때, 일·생활 균형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그러나 현재 경북도의 사업을 보면, 22만 6천개 사업체 중 300인 이상이 0.1% 10인 미만이 92.6%임. 경북도는 중소기업규모의 사업체가 대다수임. 300인 미만 종사자는 전체의 80%로 경제적인 기본 여건이 약함.
- 가족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지만, 경북도 대부분의 기업에는 실효성이 없음.
  - 해당이 없는 경우도 많고, 해당이 될지라도 인센티브가 없어서 동기가 약함.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마인드가 중요함. 중소기업이더라도 기업주가 어떤가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사업주에 대한 마인드, 인식에 대한 교육 역시 포함시켜 진행한다면 공감대의 확산에 중요할 것임.
- 경북도의 경우,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주하는 것이 문제임.
  - 이를 위해 일자리, 주거는 늘 이야기 되는 것일뿐더러 교육이나 돌봄, 문화, 교통 인프라 역시 갖추어져야 함.
    - 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타 시군구로 이동할 것이라는 청년들은 약 60%임
  - 도 내에서 정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주거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임. 다음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은 여가문화 및 교통 인프라, 의료 시설 등임.

- 시골의 경우, 전문의가 없어서 출산을 하러 멀리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임.
- 농촌사회에서 정주 여건을 이야기할 때, 주요 거점시설은 읍면 사무소, 보건소, 초등학교, 도서관임.
- 경북도는 2020년부터 30개소 주요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복합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것임. 그러나 이 역시 시 단위에서 운영함.
- 이보다는 열악한 소멸 고위험 지역부터 복합플랫폼을 기본 인프라로 깔고 배후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함. 이러한 지역에 일본의 커뮤니티 마을 버스와 같이, 농촌의 아이들, 청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도입했으면 함.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인프라의 하나인 교통이나 의료 영역은 공공영역에서 진행했으면 함. 이외 보건소에 전문의를 상주시키는 방안 역시 고려했으면 함. 현재 경북도에서 고려하고 있는 119 도우미 서비스보다는 보건소가 훨씬 접근성이 높다고 판단됨. 경북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보건소 개소수도 많고 이용률 역시 높음.
- 다음은 돌봄의 문제임. 초등돌봄을 위해 연계사업을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합의가 어려움.
  -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면 함.
- 함께 돌봄, 함께 일하기와 관련해서 세대간 잇기가 가능할 수 있음.
  - 경북의 특성일수도 있지만 5060 신중년 세대가 2045세대와 7080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

- 신중년이 마을돌봄, 세대돌봄을 지원하고 그 세대들이 또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차원에서 (농촌에서 조합형을 만들어서) 돌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시민 패널 A

-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많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
  - 관련하여 포털사이트를 잘 구축했다고 하지만, 정책을 수혜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찾아서 이용하기가 불편함.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했으면 함.
  - 예를 들어 노인일 경우 어떠한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었으면 함.
- 지원에 필요한 조건들, 소득분위 같은 것들이 까다롭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보니 정책이 많은 듯 하나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없음.
  - 현재 부부 합산소득 기준 금액을 제시한 것과 실질 금액간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 □ 시민 패널 B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출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구정책, 경북형 인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됨.

- 경북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편인데 이중 군위군은 지역 소멸 1순위인 지역으로 결혼이주여성이 60% 이상을 차지함.
- 경북도에서는 다문화 가족,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출생도구로 보는 게 아니고 지역인재 개발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음.
  -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았음. 그러나 정주 기간이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글로벌, 글로컬(global)한 인재들로 자라나고 있음.
    - 경북에서는 이들을 지역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2008년부터 지역에서 대학가기 정책을 실시함. 지역 내 15개 대학에 반값등록금, 또한 지자체에서 격려금을 지급하며, 지역 내 전문일자리로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한 바 있음. 이중 130명이 지역 내에서 현재 활동 중임. 지역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음.
    - 또한 대학가기 정책으로 배출한 사람들 중 40명을 선발해서, 출신국과 글로벌 무역을 하는 이주여성을 양성하고 있음.
    - 이외 이주여성들을 출신국과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바이어로 활용하기도 함. 예를 들어 OO 지역에서 본국인 베트남에 지역 특산물을 판다거나, 축산농가에 많이 필요한 톱밥을 그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였는데 이주여성들의 도움으로 본국인 베트남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음.
    - 최근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신국 기금 중 방학동안 이중언어 몰입캠프를 지원하고 있음.
- 이제까지의 정책은 수도권 중심이었음.

- 그러나 지역은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함. 출생이나 돌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대안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합한 인재로 양성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음.

□ 시민 패널 C

- 지역에서 농업을 진행하는 여성청년으로써, 최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책을 알게 되었음. 농림부도 여성복지팀이 신설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복지정책 개선에 힘을 쓰고 있는 듯함.
  - 그러나 향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면 함.
-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소득 불안정도 있겠지만,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임.
- 또한 현재 지역에서 노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데, 농한기 시즌에는 함께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농번기시 고령남성의 아사(餓死)가 빈번함.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시민 패널 D

- 우리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원인은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함.
- 지식정보화 사회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민은 가치사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농경이나 산업사회였다면 저출산·고령화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

-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어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생긴 문제임.
  - 관련하여 대응을 하고 있지만, 행정관료나 정책들은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음.
  - 저출산이라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가치중심 사회로 전환된 이후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임.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 국가적 차원의 패러다임을 먼저 고민해야 함.
  - 현재는 너무 분절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음. 전체를 조망한 후에, 그래도 생겨나는 문제에 대하여 대응을 했으면 함.
    -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중심사회로의 빠른 전환임.

## 제9절 대구광역시

### □ 전문가 패널 A

- 기존의 출산장려나 돌봄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과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음.
- 지난 10월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인구가 49.97%로 우리나라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이같은 상황에서 영남, 호남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음. 궁극

적인 해결책인 자립적 발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첫 단계는 문제의 정확한 인식임.

- 현재는 합계출산율 쪽에만 인식이 매몰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첫째, 국가의 기본계획 안에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둘째, 지역의 특성은 이동(유입, 유출)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나 논의가 없음.
    - 지역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국가는 역할이 부재함.
  -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하여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라 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제4차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에 대한 고려를 많이 반영했으면 함.
  - 시도별로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와 무관한 사회의 분위기를 마련했으면 함. 지자체가 인구감소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무리한 정책과 사업을 벌이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둘째,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각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서로 협업이 필요함.
  - 셋째, 위기에 따라서 지역을 점검해야 함. 일차적으로는 중소도시, 이차적으로는 대도시가 인구유출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함. 이를 위해선 대구가 최종 저지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함.

□ 전문가 패널 B

- 인구정책에 대해 국가와 시·도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함.
  - 또한 연구진이 실제로 개입하는 인구조절정책과 인구변화가 나타났을 때 대응책인 인구대응정책은 서로 구분되어야 함.
- 인구조절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의 차원에서는 인구의 유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인구가동에 대한 문제를 지자체에 맡길 시 미흡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 재배치 정책에 대해 신경을 썼으면 함. 물리적으로는 수도권인구를 재배치 하는 방법, 사회적으로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퍼주기 식의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나, 지역적 인구 이동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많음.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인구 이동 정책이 포함되어야 함.

□ 전문가 패널 C

-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큰 변화가 있기 어려움. 오랫동안 이 상태로 흘러갈 것.
  - 인구정책에 대하여 중앙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어떤 국가의 정책이 성공하였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정책이 왜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수용하도록 하는 노력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됨.
- 사회 전체가 아직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내려놓지 않고 있음.
  - 통상적 가족의 개념을 벗어난 이들에 대해 낙인을 부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존재함.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비혼 가구의 출산율이 올라가야하는데 사회적으로 아직은 전통적 가정이 아닌 출산에 대해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보수적인 현재 사회에서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 돌봄이 매우 중요한데, 독거노인 또한 가족제도에 대해서는 외부에 놓여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방적 차원의 돌봄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아직까지는 사후 치료적인 대책이 강함. 보다 예방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 전문가 패널 D

- 인구 구조에서 연령별 불균형이 일어남.
- 중앙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체 산업규모나 소득수준 등을 추산하여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적정 인구 규모에 대해 연구할 때, 전체 사업규모와 삶의 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스스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 국민들이 아는 바가 없음.
  - 여생을 자가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살면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 패널 A

- 지역을 중심에 두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야 함.
  - 국가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가 추구해나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
- 지역 중심의 돌봄 정책들이 필요함.
  -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역에서 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함. 지역의 총량을 고려하여 노인, 아이, 취약계층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
  -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족이 책임지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함. 이에 관련 교육이나 인식개선 등이 마련되길 희망함.

□ 시민 패널 B

- 저출산·고령화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 관심을 갖게 해야 함.
  - 결혼을 하게 되면, 배려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 좋은 예시를 보여주면 좋을 듯함.

- 육아가 반드시 힘든 것은 아니라는 정책들이 필요하며, 힘듦을 감당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함.

#### □ 시민 패널 C

-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모임을 통해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 육아나 집안일은 모두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실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도나 지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음. 홍보가 절실함.
  - 또한 대구 지역 내에서도 각기 다른 정책들이 있으므로,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구에서 정규 교육을 다 이수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정주하는 경우가 있음.
  - 대구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적다고 보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시민 패널 D

- 최근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하여 노인 인권이나 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12월부터는 시설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
-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 역시 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그러한 경우가 많

음.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임.

□ 시민 패널 E

-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러한 직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력단절이 가장 클 것임. 주변의 경우에서도 육아휴직을 쓰고 나면 해고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꺼리게 됨.

□ 시민 패널 F

- 2017년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5.8%라고 하며, 현재는 이보다 많을 것임. 그러나 정작 이들을 위한 지원은 매우 미미함.
  - 국가에서는 둘째, 셋째아 다자녀 정책을 펼치고자 하나, 첫째아가 있어야 추가출산이 가능한 것으로,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지원을 횡수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함.

□ 시민 패널 G

- 출산 장려를 국가 중심으로 펼쳐나가되,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지역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할 것임.
  - 지역별로 인구 유출 수준 역시 상이하므로, 지역별 지원금액(예산)도 차등화하여 편성해야 할 것임.

## 제10절 충청북도

### □ 전문가 패널 A

- 저출산이 난제이긴 하나, 청장년층 삶에 대한 의식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
  - 아이를 낳아서 더 행복해 질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노동시장과 관련될 것임. 비정규직, 계약직과 같이 직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학까지 지원하는 데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결혼을 보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음.
  - 이는 교육과 주택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문제임.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미임.
- 거시적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은 세대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연금과 건강보험이 대표적임.
  -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인상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임.
  - 그러나 이를 위해 직장인은 개인의 경우 6.5%, 자영업자는 13%를 지불해야 함. 연금 역시도 자영업자의 경우 9%를 순

수하게 부담하는 상황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조세부담이 작용함.

- 노인 의료비 역시 작년 기준으로 31조 8천억, 약 40%가 지출됨.
  - 젊은 층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담하지만 이것이 모두 노인에게 간다는 인식이 있고, 연금 역시 내가 노인이 되어서는 못 받거나 수급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이는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세대간 갈등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이 듦.

○ 과연 지방에서는 얼마나 인구감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고 있는지 제고해야 함.

- 2019년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충북은 0.68로 주의단계에 있음.
  - 세종이나 대전으로의 유출이 많은데, 청주를 이 도시들보다 낫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매력적인 도시로 바꾸어야 유입이 더 많이 될 것임. 안정적 직장은 물론이고 녹지나 학교와 같이 인프라도 좋아져야 함.
- 일본의 시정촌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세 곳이 있는데 이중에서 야마카타 현의 경우, 아이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의료비를 경감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하였음. 지자체의 재정을 절감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측면에서 인구가 증가한 바 있음. 두 번째 나가야마 지역 역시, 맞벌이 부부의 돌봄 환경 조성파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 좋은 공기와 녹지 등의 자연환경 구축을 통해 인구가 증가한 사례가 있음. 지방정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결과를 창출하였음. 충북 그리고 청주도 인구의 유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잡하긴 하나, 정책방향으로는 이와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 전문가 패널 B

-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었음. 이 문제들을 기존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함.
- 또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보건복지적 관점에서만 바라봐 왔었음.
  - 주무부처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복잡한 사회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돈으로 메꾸는 형태의 접근방식이 되었고 결국 지출구조의 문제를 안게 됨.
-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현상에 대한 진단 없이 복지예산을 지출하고, 생활안정 차원에서 돈을 살포하는 형태임.
  - 정치권 역시도 포퓰리즘 형태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정책 지원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역차별이 생겨나기도 함.
  - 현재 고령자에게 전철이나 지하철 요금은 100% 국가가 부담함. 그러나 지방은 이러한 혜택이 없음. 똑같은 국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이 생겨남.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충북 역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근로여건을 보면 긴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수준은 상당히 낮은 지역임.

- 이것이 지역의 현실이자 다른 지역과의 차이임. 생활환경 차이가 분명히 있음.
  - 저출산 측면에서 충북의 예산지출을 보면, 금년도 1,733억 이 관련 예산이나 충북 전체의 재정에서는 26%를 차지함. 전국 평균 저출산 관련 예산이 28%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충북은 전국 중 최하위에 속함.
- 충북의 고령화율은 16.8%이나, 보은이나 괴산, 영동, 단양, 제천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부분들을 똑같은 잣대로, 획일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사회관계망 하에서도 얼마만큼 튼튼한 구조를 구축을 해 왔는가에 대해 제고해야 할 것임.
  - 대한민국의 사회관계망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그간 단편적으로 접근해 온 것이 아닌지 반성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나타난 현상으로 지역소멸까지 대두되고 있음. 내부적 환경 뿐 아니라 외부적 환경, 사회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문제로 해결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접근시각과 관점을 바꾸어야 함.
  - 재구조화 로드맵부터 바뀌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집행방식은 금전적 살포형태에 지나지 않음.
    -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임. 금전적 해결 방식은 결국 국민의 의존성만 높이고,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임.

- 따라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획일적 정책 집행에서 탄력적 정책 적용으로 바뀌어야 함.
  - 단순히 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포괄적, 융복합적 접근방식도 고민되어야 함. 또한 현재의 금전적 지원 방식은 각자 알아서 살라는 의미의 개별도생 방식임. 그런 의미에서 연합도생 방식으로 바꾸어줘야 함. 이것이 현 정부의 포용사회의 부분과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그러므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정책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음.
- 지표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나 국민적 신뢰 가져올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하며, 평등지수나 격차문제 해소와 같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의 해결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정책 연대나 패키지 지원 방식이 필요함. 단선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재원 부족 뿐 아니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독일은 모성보호법 하에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펼침. 출산 이후 4개월까지는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줌.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산부인과와 관련한 외상진료를 포함한 무료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료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 이 같은 추세로 인해 선진국 가운데에서 합계출산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아울러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방식에 대해서 마을과 공동체 중

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관련하여 일본의 한 지역은 자치조례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였음. 또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한정 고용제도를 도입하기도 함.

○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방식을 격상시켜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가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기에는 그 영역이 광범위하므로, 기획재정부나 국무조정실로의 과감한 격상과 통합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지원 방식을 지출구조 혁신방식으로 바꾸어야함. 중복 및 유사지원이 너무 많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함. 이같은 부분에 대해 향후 일원화가 필요함.

#### □ 시민 패널 A

○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 문제를 보는 관점을 거시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함.

- 다만 우리사회 경제 변화 속도에 비해 양육과 돌봄과 같은 가족구조 문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패러다임 전환은 바람직하며, 가족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함.

○ 사회통합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우리 사회는 현재 갈등과 분열의 시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통합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 대안없이 문제만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 거시적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하고, 계층간·세대간 갈등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동시에 끊어진 계층간 사다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청년들은 희망과 비전을 갖지 못할 것임.
-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사회적 신뢰임.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이 어려울 것임.
  - 동시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야 함. 공동체 의식 없이 아동수당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지원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함. 그러므로 사회통합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 실현되어야 함.
- 두 번째로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이미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여전히 사회 정의적 측면의 평등 관점에서 이들에게 기회의 균등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여전히 편견이나 차별에 노출됨. 가족의 다양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아이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자녀의 양육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들을 파견하는 사업임.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데, 가족 경제

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분됨. 수급권자 역시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음. 시간당 비용 자체로는 많지 않으나, 한 번 아이를 맡길 때마다 평균 3~4시간을 이용한다고 계상할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불능력이 어려워 서비스에 진입하기 어려움.

- 특히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양육부담감이 훨씬 가중되지만 이들의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짐. 지원정책의 폭이 넓어져야 하며, 수급권자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청주시에는 한부모 여성 가구의 취업교육 지원 정책이 있음.

- 사업모니터링 결과, 참여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예산이 남는 것을 확인함. 차상위 계층의 여성 한부모 가구주를 대상으로 사업이 운영되나,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를 맡기고 일정기간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움. 또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대, 아이의 양육부담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
- 취업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텐데, 그 기회조차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 한부모 가구 지원시, 자립기반 제공을 위해 취업이나 훈련 참여 기간만이라도 자녀를 맡아놓고 맡길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 가족 다양성이 인정되고 수용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이 확대되었으면 함.

- 다양성 공존은 결국 존중, 배움, 배려에서 출발함.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가족중심의 복지 실천이 강화되며, 지역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교육과 복지 연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지역공동체 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 충북 내 경로당이 약 4천 곳인 데 반해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장소는 미흡하다고 생각됨.
  - 관련해서 현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품앗이를 통해 함께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공간임. 이 활동을 통해 양육 부담감을 경감하고 아이는 함께 키우는 것으로 문화와 관점을 전환함. 그러나 이러한 공동육아 나눔터는 청주시 내에 3개소에 불과함. 우리가 아이를 함께 잘 키우는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음.
- 세 번째는 양성평등 실현하는 사회여건 마련이 필요함.
  -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는 제반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육아휴직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나,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그 업무수행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있음.
  - 보육 영역에서는 대체 인력풀을 확보하여 육아휴직시, 훈련된 인력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알고 있음. 대체 인

력풀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된다면, 당사자도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기관 역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가 아동친화 사회를 추진하는 현 상황은 바람직함. 다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함.
- 네 번째, 지역 내에서 아동 돌봄체계에 대한 통합네트워크가 마련되었으면 함.
  - 아동 돌봄체계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각각의 부처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현장 안에서는 네트워킹이 어려움.
    - 중앙에서 통합 네트워킹을 하기 어렵다면, 지역단위에서 촘촘하고 안전한 통합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함.
- 종합할 때, 지역, 공공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일을 선별해서 접근해야 할 것임.

#### □ 시민 패널 B

-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나 사안별로 예산 퍼주기 식으로 되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관련해서 복지, 주거, 일자리가 연동된 복합적인 사회구조망에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
    - 그러나 종합적 대책을 중앙차원에서 마련할지라도, 지역으로 오면 담당부서가 상이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되지 않음. 지자체 내에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임.

- 둘째,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당사자가 공급자이면서 수요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음.
- 셋째, 충북의 복지예산을 보면 중앙정부와 매칭하는 사업이 대부분임.
  - 지자체 고유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매우 미미하여, 확고한 저출생, 고령, 복지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넷째,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 일자리나 노동의 문제와 관련짓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움.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여 마을 안에서 공동육아 시스템을 진행하는 것을 들 수 있음. 노인 일자리를 통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을단위의 공동육아와 공동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함. 기존 지역 자산을 활용한다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시민 패널 C

- 노인 일자리를 금년도 60만개에서 차년도 전국 80만개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장의 의견은 이와 다름.
  - 즉, 과연 이 일자리들이 노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 일자리를 통해 소득 보전, 심리적 안정, 사회참여 측면에서 긍

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제고가 필요할 것임.

- 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볼지라도, 70세까지는 건강하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있음. 그러나 실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사회 내에서도 노인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현재 본 복지관에서 진행중인 노인 일자리 인력파견형 사업에 150명에 참여하고 있으나, 청소나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경우는 1년에 10~15분 정도에 그침. 대부분은 일회이나 단발성 일자리로 연결됨.
- 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복지관의 건강 프로그램을 사전적·예방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사후적 성격임. 사전적 차원의 예방프로그램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것임.

#### □ 시민 패널 D

- 고령화에 있어서 빈곤노인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핵심은 가계소득이나 개인소득의 증진이라고 생각함.
  - 우리 사회전반이 기업성장 중심임. 이보다는 개인이나 가계소득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이라고 생각함.
    - 소득주도 성장이 인구론적인 부분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청주를 매력적 도시로 만들자는 이야기는 곧 지역균형 발전임.
  -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늘리기 보다는 있는 인구를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원이 있어야 함. 현 정부에서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하는 비율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긴 하나, 이를 50:50과 같이 과감히 조정했으면 함.
- 지방정부가 인구정책에 과감한 투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 측면임.

#### □ 시민 패널 E

-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주로 접함.
  - 저소득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를 둔 가정을 보면, 부모의 가치관이나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생각들이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아이 돌봄정책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온종일 돌봄정책 등은 돌봄 체계의 재편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현상유지에 그치거나 아동센터의 역할이 축소되는 모습임.
  - 2004년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이후,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장기간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음.
  -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도 보편적 복지로 운영되어야 하나,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전담하고 이외의 아동(일반 아동)은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돌보는 상황임.
  -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임. 현재는 취약계층 80%, 일반 20%로 운영되거나 전반적으로 그 대

상이 확대되어야 함. 아울러 경로시설에 비하면 지역아동센터 수가 턱없이 부족함.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 확대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70% 정도로 많음. 개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최저임금은 인상되는 등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음.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고민해야 함.

#### □ 시민 패널 F

○ 노인 일자리가 80만개까지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일자리 증가인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설명회를 실시함. 그러나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보다는 대도시 중심의 사업설명에 그침.

- 청주도 서울과 비교하면 농촌에 가까운 성격임.
-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 가까움. 그러므로 이 지침을 반영하기 어려워 기존 사업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고 있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나 시범 운영을 통해 정확한 매뉴얼을 지역에 보급했으면 함. 이것이 가능할 때 현장에서도 공익성을 띤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9988행복지킴이 사업은 충북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감.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

원에서 도움이 되었음.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독거노인의 고독사 사례를 발견하여 재빠르게 대응한 경우도 있고,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민(사업기관)-관(주민센터)의 연계가 부족한 것이 문제임.

- 대상가정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데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대상자를 모집하기 어렵고, 어르신들 역시 본 기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방문할 때 오해를 갖기 쉬운 상황임. 민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자체 사업량 증가에 반해 관리 직원들의 인원 수는 적음.

- 현재 시니어클럽 이용 노인은 연간 1,000명~1,300명에 이르는데 이를 담당하는 정규직 전담직원은 6명임. 계약직 직원을 뽑긴 하나 1년 11개월까지만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모니터링도 미흡해짐.

#### □ 시민 패널 G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약 130조가 지출되었으나, 대부분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으로 지출되어 이것만으로는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고 볼 수 없음.

○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강력하게 국가기반의 일원화를 통해 저출산 정책에 접근함.

- 프랑스의 경우 국립가족수당관리기관에서 수당을 일원화하나,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 여러 곳에서 지급을

하니 현장의 혼선은 물론 일회성 지급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

- 또한 프랑스는 노동법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을 강력하게 보  
장하고 동거법이 존재함. 반면 우리나라는 여성 공무원의 경  
우 육아휴직 후 복직이 자유롭지만, 일반 사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또한 미혼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따가운 시  
선이 존재함. 전 국가적 차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 아이를 신뢰하며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이 많아져야 할 것임.
- 복지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  
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지방에서는 인프라 확충에 전념했으면 함.

## 제11절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 전문가 패널 A

-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목표로 성평등 구현이 크게 부각되었으나,  
목표 이외 성평등 구현을 위한 활동이 없다는 아쉬움이 없음.
- 제4차 기본계획에는 실제 성평등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가 성평등 측면일 수 있지만 본질적  
차원의 성평등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임금공시 역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광주의 많은 기관에서는 임금공시(공표)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 저출산·고령화 정책 아젠다에 성평등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었으면 함.
- 광주는 20~30세의 고학력 여성의 인구유출이 많은 지역임.
  - 여성인구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 우리 지역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중앙 차원에서도 지역의 격차를 고려해야 함.
  - 이와 함께 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되었으면 함.
    - 돌봄에 대한 남성 참여, 가족 평등의식과의 연동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지표가 나왔으면 함.
- 광주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기관들이 많지만, 불만족도 역시 아주 높은 지역임.
  - 돌봄기관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며, 행정적 차원에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
- 통합 돌봄케어시, 돌봄주체인 여성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시켰으면 함.
  -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할 때, 돌봄 대상 뿐 아니라 돌봄 주체가 되는 여성들도 포함하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확대했으면 함.

#### □ 전문가 패널 B

-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 문제임.
  - 성별, 일자리, 기회의 불평등이 일상에 만연함. 그러므로 청년

들은 현재의 문제를 자기 세대에서 끊고 싶은 욕구가 강함.

- 청년들의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 일자리와 주거공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자리 불평등 해결이 선결되어야 하며, 주거공간 역시 삶의 질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함.
- 아동의 돌봄과 관련하여 현재 광주 내 관련 기관(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은 모두 개별화되어 운영 되고 있음.
  - 시설 중심의 공적 기반과 가족이라는 가장 안정된 자원이 지역에서 결합, 형성될 수 있는 정책들이 편성되었으면 함.
- 중앙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복지정책을 해야 함.
  - 지역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재정 배분이 필요함.
    - 인구수와 비례하여 국비 교부금 주는 것을 전환하여,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부금 편성 노력이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임.
  - 각 지역적 특성에 맞춰 적절한 인구가 살 수 있는 도시, 균형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함.

#### □ 전문가 패널 C

-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저하는 비용부담과 관련됨.
  - 프랑스의 경우, 현재 가족중심 정책을 펴고 있음. 가족수당을 제공하거나 부양가족에게 아동수당을 강화함.

- 같은 업무를 할지라도 부양 가족이 많다면, 연봉 차이가 발생함.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며, 우리나라 역시 가족기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임.
- 노인의 돌봄에 있어서도, 시설돌봄 다음으로 가정 내 돌봄을 강조하고자 함. 가족 고유의 돌봄 기능을 뽑아낸다면 국가재정 절약이 가능할 것임.

○ 이민정책 없이 다음 노동세대를 채울 수 없을 것임.

- 다만 한국은 민족성이 강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아직 현존함.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노인복지정책 관련하여, 노인의 연령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노인들 스스로도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제기되는 실정임.

○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전남과 전북은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곳들이 있음.

- 해당 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10%라는 의미임. 이는 곧 중앙정부에 지역이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함.

- 중앙정부 역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 시민 패널 A

○ 직장맘 지원센터에서는 작년부터 혁신사업으로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사업을 실시함.

- 100인 미만 기관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 이에 그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이들에 대해 보상적 차원의 급여를 제공함.
  - 지역의 노동청과 협력하여 16개 기업, 21명에게 수당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현장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었음.
  - 즉, 지역에서 틈새로 할 수 있는 것, 중앙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개발해야 할 것임.
- 여성가족부 사업인 가족경영 친화지원금을 통해, 인증 기업에 프로그램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음.
- 중소기업에서는 임산부 의자 교체 등 자발적으로 회사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이외에도 직장맘 지원센터에서는 워킹맘들이 많은 회사에서는 협동조합을 통한 반찬서비스,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숙고할 수 있도록 종갓돈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높았음. 이같은 정책들을 계속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 출산휴가 기간의 확대가 필요함.
    - 현재 법정휴가가 3개월이나, 현장에서는 6개월까지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음.
  -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고용보장이 명시되어야 함.
    -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시, 고용보장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근

로소득에 변동없이 운영되길 희망함.

- 육아기 근로단축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음. 소득 변동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음.
- 보육 관련 일자리의 2교대 시범운영이 필요함.
  - 2교대 운영(8시~17시, 12시~20시)을 통해 겹치는 시간대에는 휴식이나 아동에 대한 정보 교류, 일자리 확대 등의 이점이 있을 것임.
- 복지기관 평가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항목이 포함되었으면 함.
  - 다만 현재 비영리법인이나 복지기관의 경우 가족친화기업이 되기 위해 심사 신청시, 약 100만원의 심사료가 부과됨.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심사비를 무료로 하는 등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 시민 패널 B

-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돌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광주는 현재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가 많이 구축되어 있음.
  - 초등 방과후 교실 294개소,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가 31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등 다양함. 또한 기타 돌봄으로 작은 도서관이 400개소에 이룸.
  - 타 도시에 비해 학령기 아동 돌봄을 위한 공급체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비스의 부재를 체감하는 것은 효율적인 영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임. 이같은 연유로 아동권

리보장원이 출범하였으며, 광주에서도 아동돌봄추진단을 꾸려 보다 촘촘한 운영을 하고자 함.

- 현 체계 개선을 위해 맞춤형 정보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시의 콜센터에 코디네이터를 두고, 서비스 대상자(양육자 등)가 전화를 하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서비스가 바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 정부나 자치단체의 돌봄 정책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음.
  - 마을, 지역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돌봄이 가능하려면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
    - 현재는 돌봄 기관으로 신청 후, 시설 규정이나 규제에 의해 부모와 아동이 환경에 맞춰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수요자의 돌봄 욕구는 아동의 등교 전 8시 30분, 등교 후 6시 30분이 많지만 실제 공급과는 격차가 있음. 기존 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과 욕구가 맞지 않음.
    - 기존 기관들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운영 시스템 규정들을 완화했으면 함.
- 학령기 아동의 돌봄 시스템 90%가 개인시설에 집중되어 있음.
  - 개인시설의 경우, 공공성과 투명성, 종사자들의 열악한 문제가 있음. 이는 곧 돌봄 서비스의 질과 연동됨.
  -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
    - 다만 이는 재정 문제와 연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정적으

로 열악한 기초 지자체에서는 고민이 많음.

- 한정된 재원에서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 아동센터 일부를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주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침이나 규정을 완화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함.

#### □ 시민 패널 C

-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국민인식이나 홍보사업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며,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를 주관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의 인식개선은 저출산 극복이 아닌 저출산 대응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수행 중이며, 출산장려란 말 역시 자제하고 있음. 저출산 자체가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으므로 극복 대상이라기 보다 이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사업을 개발하자고 함.
  - 올해부터 전국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100인 아빠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아빠단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3-7세 자녀를 둔 아빠들을 대상으로 아빠단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함. 아빠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사업을 운영 중임.
    -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아빠들이 육아나 가사를 도와준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도와준다는 표현 말고 함께 하자는 표현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 함께하는 육아라는 메시지가 많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함.

□ 시민 패널 D

- 청년이 생각하는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다른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함.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20년 전부터 고민되었던 것이나, ‘나 때’라는 식의 행정과 사회구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 앞으로 사회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 청년이 곧 저출산·고령사회의 당사자라는 생각도 변화해야 한다고 봄.
  - 청년 자체가 출산대상자라거나, 여성이 출산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
    - 본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데 출산 문제만 대두되고, 관련 대책들만 나온다면 현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할 것임.
    - 청년과 괴리있는 행정과 사회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변화를 고민해야 함.
    - 올해 광주시의 청소년과가 여성가족국으로 개편되는 안이 상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임. 이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지속되었으면 함.
- 세대별로 단계적인 정책이 명확히 구체화 되어야 함.
  - 청년 문제는 청년 당사자, 고령 문제는 고령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면, 미래준비는 전혀 되지 않고 일회성의 계획만 반복될 것임. 이를 개편한 중장기적 계획이 도출되어야 함.

## □ 시민 패널 E

- 급격한 인구 변동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불안요소에서 시작함.
  - 따라서 인구 감소폭을 줄이고,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가 핵심이며 인구성장률에 따른 사회·경제구조도 중요함.
- 19년 현재 시행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와 같은 비전 및 목표를 통해 민·관이 모든 인프라를 확충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함.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이보다는 국가 중심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과 중앙-지방 연계 방안’연구에서 4개 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및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됨.
  - 복지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보조사업 예산의 비율은 93.2%이고, 중앙정부 보조사업 예산 비율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89.8%를 차지하였음.
  - 중앙정부 주도로 복지사업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보완·보충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전제로 중앙·지방이 상호정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저출산 정책은 안정된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결혼할 수 있는 구조

를 만든 후에 펼치는 것이 근본적일 것임.

- 저출산 영역의 근본문제는 주거정책과 소득격차문제(양극화 문제) 등이 더 클 것임.

- 관련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청년주거정책으로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등이 있음. 그러나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정책 입안이 있어야 할 것임.
- 누구나 주거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함.

○ 고령사회영역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노후준비, 소득, 노후건강 및 돌봄, 노후 사회참여 촉진 및 고령친화환경조성 등 고르게 예방적 효과 및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함.

- 노후 사회참여 촉진 및 고령친화환경조성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는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노인 일자리사업이 주는 사회적 효과(건강보험 이용률 감소 등)는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음.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연령도 높아지고 있음.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밖에서 환경미화를 하고 월 활동비를 받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음. 노인빈곤 정책을 노인 일자리로 펼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함.

○ 머지않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앞지르는 사회가 다가옴.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출에 힘쓰고 인구 유치에 안간힘을 씀.

- 관련해서 2019년 김제시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특히, 청년주택수당,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축하금 지급 등 10개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출산 및 인구유출에 힘쓰는 모양새임. 광주광역시 동구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
  - 인구감소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지역소멸과 그에 따른 위기론임.
    -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더 이상 중앙에서 나오는 정책에 기대하고 의존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점차 사회학적 인구이동이 중요해지고 정주인구나, 어떻게 더 오래 머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위기 대안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임.
  - 광주광역시의 출산율은 전국과 동일한 수준이나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인구유입정책과 더불어 출산율 증대를 통한 인구증대 정책이 요구됨.
- 현재 국가 차원에서 많은 기본계획들이 있음. 많은 국가의 기본계획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문케 함.
- 현재도 각 지자체별로 많은 정책 및 계획들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행해짐.
    - 그러나 모든 계획들이 연동성이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큰 골격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국가주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나아가 지자체에서 유연성이 발휘  
되어야 할 것임.

□ 시민 패널 F

- 노인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  
면 함.
- 노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프로그  
램을 개발해 주었으면 함.

## 제12절 경기도

□ 전문가 발표 A : 돌봄의 공공화

- 공공화란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공적책임을 어  
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됨.
- (돌봄의 비용 지원 체계)
  - 소득의 실질적 증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되기 때문에, 빈곤  
에 빠진다는 것을 전제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 현재 가정 내 양육과 보육비용 지원으로 크게 두 가지 지원이  
이루어짐.
    -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더 적게 받는 지원. 가정양육 비  
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낮음.
    - 바우처 방식으로 인해 서비스 체감도가 낮으며, 양육수당의

현실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으로,
  - 영아 양육기본수당 도입이 필요함. 또한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체감도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음. 전체 총액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지 않도록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0세 만이라도 부모 양육이 잘 되도록 양육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는 이를 뒷받침함.
  - 가정 내 양육지원이 다양화 되어야 함. 가정 내 시간제 돌보미를 이용하거나, 산전·산후 우울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건강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정 영유아에 대한 놀이지원 등 영유아 발달 및 육아정보 서비스가 확장되어야 할 것임.

○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 돌봄의 공적 서비스체계를 온종일 서비스체계로 구축해야 함.
  - 다만 초등학생의 공적 돌봄 이용 비율은 영유아에 비해 낮음. 공적 체계에서 방과후 돌봄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방과후 서비스는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공 기관에 따라 서비스 분절과 역할의 중복이 발견됨. 서비스 질과 사각지대 발생 등 총체적인 자료가 부족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구성을 통한 전달체계 구성이 필요함. 또한 돌봄 서비스의 수급 점검 및 질 관리를 통해 믿고 맡기는 온마을 돌봄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함.

○ (돌봄의 안정성)

- 방과 후 돌봄과 같이, 현 정부는 촘촘한 돌봄을 강조하고 있음.

- 보다 나은 돌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우선 설치 지역을 설정하고, 초등돌봄 미운영 지역이거나 지역아동센터 미설치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할 것임.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와 사례분석도 강화되어야 함.
  - 가정 내 돌봄 안정성을 위한 양육 역량 지원도 모색되어야 함. 부모의 역량강화 및 양육 지원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 전문가 발표 B : 가구변화 및 가족 다양성

##### ○ (중앙정부 :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막스베버가 논한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보면, 어느 정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경로에 의존하여 달리다 보면 계속 그 방향으로 달리게 됨.
  - 우리나라는 가족정책의 공공 비중이 OECD 내에서 낮은 비율에 속함.
  - 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에서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제공되는 반면 현금지원은 미비함.
  - 가족정책과 관련한 공공지출은 현금, 서비스, 조세제도로 구분됨. 조세는 크지 않아, 결국 현금과 서비스로 구분됨.
  - 현금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정부의 소득 보전, 한부모 소득 지원 등, 서비스는 영유아보육 및 시설, 가정방문 서비스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은 경로 의존성에 따라 현금은 증가하지 않고, 서비스 지출 분야는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 지출은 GDP대비 1%를

넘고 있으나, 현금성 지원은 GDP의 0.18%로 서비스 지출이 현금 지출의 5배 수준임.

- 미국은 현금지원이 거의 없음. 주정부나 민간에서 현금지원을 하는 미국을 제외하고 0.18%로 OECD 중 최하위 수준. 우리는 GDP 대비 1.4%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현금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함.
-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현금이나 사회보험화 정책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 할 수 없다면 지방정부에서 파일럿 형식으로 현금지원 정책이 도입이 가능할 것임.
-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하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선별적 복지 하에 도움이 필요한 특정 집단에 보다 내실 있는 선별적 현금지원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방정부 : 다자녀가정 정책의 현실과 과제)

- 저출생의 근본적인 부분은 유자녀 가족이 다자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
- 미혼, 비혼 보다 다자녀 가족을 확실히 우대한다면 다자녀로의 이행이 가능할 것임.
- 신생아 중 셋째아 비율이 낮은 것이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현금 지원이 모두 필요함.
- 다자녀가정 부모 역시 경제적 부담, 소득 불만족이 높음. 무엇보다 다자녀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소득과 시간빈곤으로 자신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무상교육 및 아동수당 등 보편적 지원이 필요함.
- 지자체는 다자녀가정 등 특정집단에 대한 선별적 혜택을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프랑스는 사회적 형평 개념으로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 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자녀 가중치를 적용함. 또한 다자녀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거나, 다자녀 가족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등 내실있는 정책적, 사회적 지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방정부 : 한부모가족이 평등하게 사는 경기도)

- 차별없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득빈곤, 시간빈곤을 모두 경험하는 이중적 빈곤 경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소득빈곤과 시간 빈곤 중 하나라도 경험하는 인구는 25%이며, 한부모는 특히 시간빈곤에 취약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시 조건없는 보편성 원칙의 기본소득이 확장되어야 함.
- 부모 중심이 아닌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기적 실태조사가 요구됨.

□ 전문가 발표 C :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 노동 확대

- 삶의 질 개선과 성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 (노동시장 공정성과 성별격차 해소)

- 노동시장 성별격차는 다양한 방면에서 존재하는데, 임금 격차는 물론 고용의 안정성,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들 수 있음.
  - 일하는 당사자로서의 남녀를 통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가 필요함.
- 해결을 위하여,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보장 확대가 필요함.
  - 고용보험을 납부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어야 함. 경기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 지침이 적용된 바 있음.
  - 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도 완화되어야 함.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의무화' 및 'CSR 정량 지표 포함', '경기도 성평등기업 시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돌봄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 및 돌봄 노동자 복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돌봄노동의 사회적 공공성 강화, 경기도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센터 설립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남성의 돌봄 참여 권리 보장)

- 장시간 노동은 물론 맞벌이 가구의 가족돌봄 참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족 돌봄 및 자기 돌봄 시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함.
  - 아동의 권리로서의 돌봄과 돌봄 참여의 성별 격차가 해소되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중심의 근로시간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함.

- 경기도 공공부문 노동자 대상으로 '노동시간단축 모델 발굴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으며, 고위직 남성 대상으로 '유연근로제 의무사용제 도입'되고 있음.
- 육아휴직기간 가계 소득대체를 위한 지원사업, 경기도 '일-생활균형 플랫폼' 활성화, 지속가능한 삶의 질 지표 연계와 같은 실질적인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이 펼쳐져야 함.
- 출산 전 남성 배우자 돌봄 교육 및 휴가비 지원 사업, 남성의 돌봄 참여 권리 보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영유아 및 노인 돌봄 교육 실시, 경기도 좋은 부모 인증 사업 추진과 같은 남성의 돌봄 참여 권리 보장과 돌봄 역량이 개발되어야 함.

## 제13절 인천광역시

### □ 전문가 패널 A

- 인천광역시는 합계출산율 1.01로 초저출산 지역이나, 인구이동 측면에서는 송도나 청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전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도서지역인 옹진, 강화, 동구 등은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지역 내 편차가 큰 편임.
  - 합계출산율은 옹진군의 경우 1.34명으로 높고 계양구는 0.90으로 낮음. 전체적 경향성을 볼 때, 인구유출이 많은 곳이 합계출산율 역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출산과 인구이동을 유도하는 요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의 상호작용이 곧 저출산으로 연결되며, 초저출산이라는 심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육아와 관련해서는 양육비용이나 다자녀 돌봄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 육아부담 정도, 보육시설의 양이나 질적 인프라가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출산장려금이나 보육시설의 수, 지자체의 예산비율과 같은 육아정책 역시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향후에는 양적 확장 뿐 아니라 질적 측면을 보완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보육시설 중심이 아닌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됨.
- 육아지원 연구를 통하여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2천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의 95%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나 주거비 부담을 출산이 어려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함.
    - 추가출산 계획은 19.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향이 없다고 한 비율은 외벌이 가구 혹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추가적으로 필요한 출산 장려 정책은 경제적 지원 확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국가지원 확대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에 대한 욕구가 인천시민들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종합할 때, 현행 수당에 대한 제고 및 검토,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개편, 서비스의 질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육아인프라 확대 조성 과 양육비 부담 완화, 육아정보 지원, 현행 인천육아정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전문가 패널 B

- 저출산고령화 현상 자체는 인구학적 문제라는 동일성을 갖지만, 문제 원인이나 해결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함.
  - 이를 갈등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급, 젠더, 세대의 재조정이 필요함.
    - 계급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때, 젠더 측면에서는 사회 내에서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유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때, 세대 측면에서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책임의식을 갖고 본인이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임. 계급, 젠더, 세대는 이렇듯 거시적 조정이 필요하며 장시간 소요될 것임.
    - 그러므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작업이 필요함.
- 고령화 현상은 현재 있는 정책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관련하여 중앙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함.
    - 그러나 현 상황은 치매 정책은 치매 분과,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면서 엇박자가 발생
  - 강력한 리더십을 지니고 중앙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함.

○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노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함.

-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 시급하게는 부양의무제를 조속히 폐지하는 것임. 보충적 소득 강화와 같은 추상적 정책도 필요하나, 급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노인 자살 역시 중요한 문제이나, 관련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음.

- 현재 자살과 관련한 정책은 대다수 의료나 심리 측면에서만 접근되나, 자살은 예방이 훨씬 중요함.

- 중앙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러 부처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

○ ‘고령화’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것이나 이를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노인들 스스로 나이가 드는 것을 문제로 받아들이게 함.

- 짐스러움(burdeness)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용어 사용을 신중히 해야 할 것임.

○ 인천지역의 경우, 도농지역간 격차가 큼.

- 특히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노인인구가 많지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함.

- 인프라를 확대한다 할지라도, 보건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것임. 타 지역의 사례(경북, 치매보듬마을)를 벤치마킹하여 인프라를 확대하기 보다, 지역사회 자산을 최대한 활용

하는 것을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임.

□ 전문가 패널 C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전히 여성들을 책임의 주체로 집중시킴.
  - 일가정 양립 사회는 선한 의지로 만들어진 용어겠으나,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
- 현재 논의되는 저출산 관련 정책은 출산율 하락이라는 현상적 문제에만 관심을 가짐.
  - 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논의에 도달하지 못함.
    - 이를 야기한 사회구조 변화 및 사회구성원에 대한 논의로 접근되어야 함. 법률혼 중심의 출산만 지원한다면 출산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시 성평등 관점이 포함될 때, 왜 기존의 계획들에서 성평등 구현이라는 용어 사용 외에 바뀐 것이 없는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저출산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이 변화되어야 함.
  -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하락한다, 낙태 규제를 강화하면 출산율이 증가한다와 같은 통념들이 바뀌어야 하며, 인식개선의 주요 내용이 변화되어야함.
-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을 볼 때, 우리사회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임.
  - 인구정책의 표어가 고출산 시대에서 저출산 시대로 오면서 변

- 화한 것과 맞물려, 사회 내에서 여성은 아이를 많이 낳는 무지한 존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기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 이것은 여성을 출산의 주체가 아닌 도구로 보기 때문임.
- 1994년 카이로 국제회의에서 인구정책의 변화를 선언함.
    - 인구학적 목표가 초점이 아닌 개별 여성이나 남성의 욕구와 열망, 권리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됨.
  - 인권, 성평등, 여성의 권한 강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산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북경의 여성대회, 카이로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한국의 정책적 방향에 들어와야 하며, 재생산권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우리 사회의 저출산 정책은 여성의 가임기에만 관심을 가질 뿐 생애 전반의 건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여성의 건강,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정책이 필요함.
    - 미국에서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재생산 건강 정책을 수립함. 우리 역시 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재구조화 역시 필요함.
-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청년과 여성들이 정책 생산의 주체가 될 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이 담당부서의 몫으로 국한되지 않았으면 함.
    - 여성의 돌봄노동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하며, 52시간 노동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남성이 같이 육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고령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나이듦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고령 자체에 대한 인식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임. 고령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노인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임.
- 이외, 향후 AI와 맞물려 인구문제를 같이 연구해 볼 수 없을지 고민이 필요함.

□ 전문가 패널 D

- 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차원의 논의임.
- 2014년도에 무상보육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많은 정책들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진행됨.
  - 대다수 보육정책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로, 그 외에 국가가 가정을 중심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반성이 필요함.
  - 0~2세 아동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전이면 교육을 마친 후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후 가정에서의 보육이 시작됨.
    - 이에 인천시는 민선 7기에 진입한 후, 시설육아로 구분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육아를 벗어나서 가정 육아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가정육아는 곧 공동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
  - 공동육아, 공동돌봄의 양육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임.

- 아이사랑꿈터라는 시설을 아파트 단지 내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인천시 어린이집은 2,100개가 있으나 공동육아 나눔터는 21개로 턱없이 부족함.
- 공동육아 나눔터 시설 역시 설치가 어려울 뿐더러 이용자의 접근성도 어려움.
- 공동육아 나눔터를 가정 어린이집처럼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서 공동육아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공동 시설 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이 곳에서 함께 육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양질의 장난감을 비치하여 마을단위로 함께 양육하고자 함. 또한 인근에 체험관을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엄마 스스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함.

#### □ 전문가 패널 E

- 인천시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 일자리는 금년도 32,019개 창출이 목표였으나 37,000개를 만들어서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41,000개가 목표임.
- 현재 노인 일자리 중 85%가 공익형임. 다만 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 중 70세 이상이 절대 다수로 자산이 부족하고 노후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 노인 일자리 사업을 국가의 퍼주기식 활동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소득보전이나 사회참여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 현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하고자 함.

- 급여수준을 높이는 일자리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군/구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매뉴얼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급하고자 함.

## 제14절 전라북도

### □ 전문가 패널 A

- 사회적 불평등, 성차별이 결국 저출생으로 이어져 온 것임.
  -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후퇴현상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불평등이 심화됨.
    - 복지국가가 쇠퇴하면서 저출생의 문제가 대두됨.
  - 한국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의 심화로 하위계층의 사람들은 상위계층의 삶을 보며 희망을 버리게 됨.
- 저출산의 문제가 청년 여성의 문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정부에서 저출산 현상은 여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며, 사회의 문제라는 포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임.
    - 이미 분절화된 가족구조 하에서 공사적 지지체계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의 육아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음.
    - 이같은 상황에서 행복한 개인,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일 잘 하는 여성 등의 역할을 모두 충족할 수 없음. 그러므로 차라리 부모가 아닌 행복한 개인을 선택하게 됨.
    - 청년들의 이러한 선택을 이기적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제고해 보아야 함.

- 여성이 재생산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돌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돌봄에 참여해야함.
  -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틈새보육이 안될 때 경로당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대가 없는 노동이 아닌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 함께 돌본다는 의미로 마을 단위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함.
- 포용적 복지국가의 의미가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면, 불평등과 성차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
  - 향후 과제는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단기 과제에 집중해야 할 것임.
  -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는 것인지의 의문이 제기됨.
  -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로 판단됨.

□ 전문가 패널 B

- 인구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회복하자는 논의는 모순적임.
  - 출산율 회복보다는 감소 폭을 좁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
  - 관련하여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인데, 현재와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임.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나,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별로 상이한데 이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함.
  - 지자체에서 직접 설문조사나 공모전을 통해 해당 지역에 맞는 정책에 예산을 투자한다면, 정책적 방향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됨.
-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한 정책은 사장된 정책일 것임.
  - 중앙정부의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는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버거움. 민간 영역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더 어려운 상황임.
  - 각 지역 내 기관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민간 영역에서 잘 수행된 사업은 공공 영역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함,
  -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책 뿐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소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성과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하고, 맥락적 부분에서 접근해야 함.

#### □ 전문가 패널 C

-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현재까지의 패러다임으로는 위기이나, 패

러다임이 변화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하여 현재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국 사회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인구가 부족한 상황을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시각의 정립이 필요함.

○ 사회의 성장에 인구 수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사회의 부양 논의에서 생산인구와 부양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시점에서 이전의 지표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모순적임.

- 지난 15년간 성과가 없는 출산율 높이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현 상황에서 한국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함.

- 출산이 사회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간주하여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 수준으로는 매우 부족함.

○ 국가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세금을, 재원을 마련할지 고민해야 함.

□ 시민 패널 A

-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청년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손꼽으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경력단절을 들 수 있음.
  - 현재의 정책적 지원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직군에 따라서 도움의 체감이 다를 것임.
- 출산 후 아이돌보미 신청시, 돌보미로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음.

□ 시민 패널 B

- 2019년 익산시의 인구는 약 28만명으로 매년 만 명씩 감소하는 상황임.
  -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어떠한 정책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 현재는 단기적 처방이 많아, 실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함.
    - 실질적 삶의 질과 연관된 정책이 필요함.
  - 핀란드와 같이 지역에 청년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대학교에 입학, 지역 내에서 취업, 이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정책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대기업의 직장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 □ 시민 패널 C

- 정책은 다양화, 고도화 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음.
  -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엽산, 철분 등을 보건소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기 어려움.
  - 임산부 교실 등의 프로그램 역시 업무시간에 진행되어 정책과 현실간 괴리가 있음.
    - 외국의 경우, 임산부 관리 컨설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함.
- 합계출산율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가임기, 혼인 이후의 가임기 출산율, 결혼 지수 등을 세분화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의 지역별 출산율에 대해서 지역간 차이를 고려해야 함.
    - 현재 세종시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비교적 젊고, 안정적 직군(공무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아동 양육이 수월할 것이기 때문임.
- 외국의 경우 가족화장실이 있음.
  - 아이의 기저귀 교체 뿐 아니라 부모의 용변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곳임.
    - 외부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수유를 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완주에서는 아파트 내에 돌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함.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교 이후 이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임.

□ 시민 패널 D

- 도 내에서 지자체와 함께 2040세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으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정책은 몇 없었음.
  - 홍보의 부족도 있겠으나, 본인들에게 필요치 않은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보니 공유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을 것임.
  -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는 못했음.
    - 지자체 내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통해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정책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등 다각적 방면에서의 홍보가 필요할 것임.
-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길 희망함.
  - 한 번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차 교육을 이수하길 희망함.
  -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도 필요함.
    - 민방위와 협조하여 진행하고자 했었으나, 민방위 고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음. 일반 기업체의 경우,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로 사업주가 부담을 느끼게 되어 교육이 쉽지 않음.
  - 보다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의무교육화가 필요하고 생애주기적인 내용을 포괄해야 할 것임.
- 적은 사업비로 운영하다 보니, 100인의 아빠단과 같은 만족도 높

- 은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됨.
-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길 바람.

## 제15절 서울특별시

### □ 전문가 패널 A

- 최근 들어 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고, 이후 아이와 함께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삶의 질 이슈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 서울수도 청년의 사랑과 삶의 질로 정책적 포커스를 두는 것처럼, 출산과 결혼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두어야 함.
    - 선택을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출산 정책을 다각화해야 함. 현금성 지원은 과감히 정리하고. 선호에 의해서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지원에 집중해야 함.
  - 단, 지방연구원과 협업과정에서 보면 여전히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됨.
    -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에는 이같은 논의가 남아있는 것이 아쉬움.
- 5세 단위별 순이동률을 살펴본 결과, 저연령층(20대)은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등의 순이동률이 높음.
  - 결혼시기에는 집값으로 인한 유출이 많음. 다만 고령층으로 갈수록 순이동률이 정체되어 있으며, 2014년~2018년까지의 패

턴 변화가 없음.

- 출산 장려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서울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측면에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삶의 질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면, 저출산 정책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으로 현금성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임.
- 출산이행률을 분석할 때, 무자녀에서 첫째 자녀로의 이행, 첫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의 이행이 어려움. 그러나 현재 출산정책 자체가 다자녀에게 초점이 되어 있음.
  - 실제로 다자녀 정책도 모든 다자녀가정이 아닌 저소득 다자녀 가정에 초점이 맞춰짐.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다자녀 개념도 버려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됨.
  - 오히려 첫째 자녀를 낳고 둘째 자녀를 추가로 낳는 것이 합계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이를 볼 때, 현재의 예산을 다자녀 지원 보다는 첫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를 추가 출산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 전문가 패널 B

- 서울시에서는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출산이 여성의 몫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권장하고 있음.
  - 저출생은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발생하지만,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기대감이 본질적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 여전히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고, 아이들의 안전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임.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에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중앙 및 지방의 역할구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관할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 위주의 제공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 이 차원에서 볼 때,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어느 시기에 지출이 가장 많은가에 대해 고려했으면 함.
    - 생애주기적으로 학령기 때 교육비 등 돈이 많이 드는 시기가 있음.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한다면, 현재의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지출이 많은 시기에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령화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촘촘한 돌봄을 지향함.
  - 이에 근거할 때 시 차원 뿐 아니라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 차원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으로는 권한이 내려가지 않고, 늘 책임만 내려가는 경향이 있음.
  - 촘촘한 돌봄은 정말 미시적인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 작은 단위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과 광역의 역할임.
    - 이같은 차원에서 동에 권한과 예산이 많이 가야 할 것임.

□ 전문가 패널 C

- 50~64세, 혹은 69세의 새로운 정책 대상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는 신중년, 서울시에서는 50+ 세대로 호명함.

- 신중년 세대와 관련한 사항은 제3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50~64세, 혹은 69세인 신중년 세대의 경우, 퇴직과 연금수급간 간극이 발생한다는 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서울시의 노인 인구는 작년 말 14.3%이나, 50+ 세대는 22.9%로 223만명에 달함.

- 50+ 세대는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징과 욕구를 지님. 기존 노인과 달리 고학력,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부모 및 자식을 부양하는 노인과 청년세대에 낀 세대라고 볼 수 있음.

○ 신중년 세대의 경우, 이같은 점에서 기존 노인과는 다른 정책 욕구를 가짐.

- 신중년 세대가 복지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물론 지원할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상층임.
-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특히 중요함.

○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역시 화두임.

- 바로 취업을 시키는 정책보다는 촘촘하게 활동에서 일자리까지의 디딤돌을 만드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울시에서도 이를 지향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1) 재능기부나 자원봉사 2) 인턴십(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 3) 취창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신중년세대는 지역 내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세대로,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도출해 내고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고독사나 1인가구 문제,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신중년 세대일 것임.
- 종합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인생삼모작 프로그램과 같은 현금성 지원)를 큰 단위로 하고,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는 일자리를 발굴한다던가 하는 역할이 분리되어야 함.
  - 즉 지역 기관을 일-활동모델에 기반하여 일자리를 개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 전문가 패널 D

- 청년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긴 하나, 이 사업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함.
  - 다만 많은 기관에서 비슷한 것들이 복제되어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음. 예산은 많이 사용되나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음.
  - 유기적으로 연결, 조정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통한 조정이 필요함.
- 서비스 지원기관을 만든다 할 때, 시민들이 실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평가가 중요. 추진방향이나 핵심전략과는 거리

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 이같은 격차를 줄이거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수행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임.

#### □ 시민 패널 A

-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증가율은 평균 0.5%씩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과 비노인의 비율은 5:1 수준임.
-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는 정책의 목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 수 있음.
  - 정책의 결과를 수치상으로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
  -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함.
- 돌봄sos,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서울시에서는 비교적 노인정책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임.
  - 다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응하여 노인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도달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노인들은 그 정책을 누리기 어려움.
    -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층은 대부분 여성 고령자들로 남성 고령자들의 이용빈도가 낮으며, 고독사 비율 역시 유사함. 사회생활을 통해 여러 활동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은퇴와 함께 커뮤니티를 상실함으로써 고독감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음.

- 이들에 대한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사실상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조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반발이 심하고, 현재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중복사업을 줄여 예산을 확보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 시민 패널 B

-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양육의 문제가 큼.
  - 현금성 복지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으로 문제에 다가가야 함.
- 주거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집을 제공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고령 인구도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함.
  - 지방으로 이전해야 주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외곽으로 이주하는 노인들이 많음.
-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중장년 남성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청년 1인가구나 독거 노인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 시민 패널 C

- 돌봄케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문화케어가 따라야 함.
  - 문화케어는 노인들의 건강과 자립,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지원함.

- 또한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노인 자신도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이점이 있음.
- 어르신들의 경우, 매일 이루어지는 서비스(daily service)가 정말 중요할 것임.
  - 일례로 어르신 인생학교를 계획하고 있음.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어떤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

#### □ 시민 패널 D

- 저출산-저출생으로 용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함.
  - 출산을 여성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명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매우 클 것임.
- 1인 가구, 고독사의 문제는 현금복지로 가능한 것이 아님.
  - 현금복지와 서비스 복지는 대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 함.
    - 그러한 차원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함.
- 서울시 특화사업인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기대됨.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해 반찬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공동체의 소속감,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게 된 것, 만남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 등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었음.
-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이미 갖추어져 있는 복지 체계,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제 3 장

종합 논의

제1절 종합 논의

제2절 종합 정리



# 3

## 종합 논의 <

-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 논의를 진행함.
- 각 지역에서 의견을 나누어주신 발표자, 토론자들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개선 방안, 각 지역의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함.

### 제1절 종합 논의

#### □ 전문가 패널 A

- 지자체별로 돌봄에 대한 정책관리가 필요한 시기임.
  - 정부부처간 통합도 중요하겠으나, 오히려 지자체 내에서의 통합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됨.
  - 돌봄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담당부서에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 인프라 확대도 중요하지만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정책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함.
- 전 생애주기에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임.
  - 성인지 감수성 교육시, 담당 공무원들 외에는 잘 참여하지 않음.
  - 직접 일하는 집행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좁히기 쉽지 않음
-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 시간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음. 5인, 1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일 경우 특히 어려움.

- 시간분야 정책이 다수의 시민에게 적용되도록 중앙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나 교육, 산업, 노동정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기본계획이나 기타 계획의 경우,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간주됨.

- 중앙정부는 부처간 인구를 주요 현안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고려하여 연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이를 모니터링 하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사업을 통해 공표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압박이 필요할 것임.
- 다만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상위법에 의한 기본계획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것임. 제4차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부처간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함.

#### □ 전문가 패널 B

○ 제3차 기본계획을 볼 때, 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함.

- 농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그나마 고령화 쪽에 언급이 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언급 수준에 그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시 진정한 의미의 농촌 관련 정책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패한 계획이라고 생각함.
  - 농촌 마을 공동체 연구 과정에서 접한 현장 활동가들은, ‘내 아이 돌봄을 위해서 혹은 이웃의 아이에 대한 돌봄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 왜 농촌지역에서 돌봄이 어려운가를 고려할 때, 경북지역은 면 소재지가 아닌 배후마을에 거주하게 되면 돌봄 자체가 힘든 상황임. 이러한 연유로 첫째아 출산 후 둘째아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농촌의 저출산 문제, 특히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커뮤니티 돌봄이 되어야 함.
  - 공동체에서 돌봄,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함.
    - 농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중 재능있는 인물들이 많음. 이들을 개발하여 마을 내에서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면 돌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농림부에서 농가보험을 지원하는데, 여러 모로 빈 곳이 있음.
  - 수급을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전업농이어야 한다거나, 자부담 비율 역시 높음(20%). 청년농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자부담을 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함.
    - 총 70일을 쓸 수 있는 상황이나, 다 사용할 경우 자부담이 많게는 80만원을 넘게 됨. 이같은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여성가족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전문가 패널 C

- 저출산이나 양육 문제 고려시,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저출산은 단기적 해결도 중요하나, 현재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당장 현실적 차원에서 대안을 생각해 볼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사회모성지수에 대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음.
    - 우리 모두가 감성지수를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광주는 돌봄기관 수가 굉장히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함.
  - 현재 광주에는 작은 도서관 300개, 지역아동센터도 312개, 마을 돌봄기관 100개 정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돌봄 시스템을 점검하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융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완화 정책이 필요함.
  - 현재 모든 정책들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 수요자가 공급에 맞추는 역현상이 생김. 정부 역시 발 빠르게 공급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것임.

## □ 전문가 패널 D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의 인구이동성에 대해 강조했으면 함.

- 저출산은 국가적 현상이지만 지역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의 이중고를 겪음.
-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왜곡된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을 많이 하게 됨. 경우에 따라서 지역간 갈등도 발생함. 이 기저에는 지방소멸론이 있다고 생각함.
  - 지방소멸론, 지방소멸지수의 효용성도 있지만, 인구문제를 산술문제로 단순화시켰다는 측면이 있음.
- 향후 지방소멸지수를 상상해 볼 때,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인구로 진입하는 시기에 지방소멸지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들이 사망하게 되면 지방소멸지수가 다시 낮아질 것임.
  - 이렇듯 현재의 지방소멸지수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고, 무분별한 지방소멸론의 발표, 언론의 재확대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듦. 인구감소에 무던한 사회가 되었으면 함.
- 지자체별로 자치조정권이 부여됨.
  - 인구에 따라서 부시장, 사무관 수가 결정되는 등 차이가 있음. 이같은 측면에서 지자체는 인구 유입에 지대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이것이 공익적 차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지자체의 인구와 관련해서는 인구에 무던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 많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행정구역 배치나 구역변경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두 번째는 사회 시스템 적용 문제임.

- 정확한 현실 진단을 통해 정해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 30년 동안 저출산 현상이 진행되었다면, 사회 각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특히 도시계획, 부동산, 행정체계, 교육, 노동 등 각 분야의 인구정책 TF(Task Force)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지자체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외적 확산 위주임. 인구 절벽시대에 어떠한 사회적 비용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미래로 연장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소신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전문가 패널 E

-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함.
  - 인구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겠으나, 출산이 인구와 관련하여 정책의 성격에 어떻게 부합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마.
-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 지역과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하며, 협업이 요구됨.

- 균형발전을 고려한 인구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정책은 중앙과 지역의 편중이 나타남.
    - 중앙과 지역이 각자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상이함.
  - 젠더 관점을 고려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함.
- 지역소멸이란 단어는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옴.
  - 사실상 해당 지표는 여성 중심 지표로 현재의 지표 사용을 계속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 전문가 패널 F

- 저출산 정책 역시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물려 변화해야 함.
  - 사회구조가 개인의 삶에 맞추어 변화하는데, 정책은 여전히 가족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함.
- 촘촘한 돌봄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함.
  - 돌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미래방향이지 않을까.
  - 현 상황에서 아이 양육의 고민을 덜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임.
  - 돌봄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의 미비점이 존재함.
    - 다만 현재 충남 지역에서는 24시간 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정책의 빈 구석을 채우고자 함.
    - 또한 유연근무와 관련하여, 현재 공공기관의 근로자에게만

가능한 한계가 있긴 하나 8세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2시간의 유연근무를 허용하고 있음. 민간영역까지 이러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인구정책의 경우, 충남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영역에 퍼붓고 있긴 하나 한계가 있음은 물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시 불안한 상황임.
  - 관련한 아이디어는 많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정책들 역시 많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 전문가 패널 G

- 제주 지역은 제주살이의 열풍으로 인해, 출산율 및 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비교적 나은 편임.
  - 단, 성인지 및 젠더적 관점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제대로 개선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자연환경, 교통 인프라, 집값 상승 등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 제주의 문제임.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음.
  - 도내의 62%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목표인 70%에 못 미치는 상황임.
  - 또한 현재 제주 지역에 위치한 400여개의 경로당은 노인여가 시설로 분류되어 간식명목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
    - 이보다 직접적으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전문가 패널 H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나, 무조건 돌봄을 확대해야 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 의문임.
  - 돌봄의 공공화를 추진할 때, 그 마지노선은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60세가 넘으면 돌봄 대상자로 보나, 실제 80세가 넘어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현재 노인의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중앙부처의 정책은 일률적으로 지역의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지역 환경에 맞게 바꾸게 될 때, 어느 한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에 부딪힐 것임.
    - 지역의 상황이 각기 다른데, 거시적 정책에서 어떻게 이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
    - 무엇보다 정책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제2절 종합 정리 1)

### 1. 지역 토론회 추진 배경

#### □ 인구 변동의 주요 특징

##### ○ 변곡점

- 생산가능인구(2017년~)와 자연인구(2019년~) 모두 감소되기 시작함.
-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오너스 시기는 2019년부터, 총 인구의 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 급속한 변동 속도 및 고착화

- 출산율 하락 및 고령화, 인구 감소의 추세가 모두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이같은 추세가 변화없이 점차 고착화되고 있음.

##### ○ 장기 지속화

- 저출산 수준은 1983년 이후 36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초저출산 수준은 15년간 지속되는 상황임.

#### □ 정부의 종합적 대응

- 그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 3차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함.

---

1) 종합정리의 주된 내용은 지역 토론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재정리한 것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중에 있음.
- 문재인 정부에 들어,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로드맵이 발표되었음.
  - 이를 통해 정책 추진방향이 기존의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나 성평등 구현으로 변화함.

## 2. 지역 토론회 추진 내용

- 2020년부터 수립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위하여, 지역 현안 및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2019년 10월부터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발표자 30명, 전문가 패널 60명, 시민 패널 70명 및 다수의 청중으로 운영됨.

## 3. 지역 토론회 주요 논의 결과

### 가. 저출산 분야

- 지역 토론회를 통해 파악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은 크게 주거, 일자리, 자녀 양육 부담, 교육, 젠더 관련 이슈 등 다양함.
- (주거) 주거 문제는 청년세대, 신혼부부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임.
  - 사회생활 시작 후 전혀 소비가 없다는 가정 하에 첫 주택 구입

- 이 가능한 시기는 약 10년 후임.
-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선결요건은 주거임.
- (일자리) 일자리는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 요건이나,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임.
- 대학 진학률은 70%에 육박하여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지만, 고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며, 재취업시 일자리 하향이동 등 더 열악한 위치임.
  - 경력단절 및 일자리 양립제도 활용 가능성이 차별적인 상황으로 성별, 여성 내 일자리 양극화가 발생함.
- (자녀 양육)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기반은 취약하며, 돌봄공백은 여전히 존재함.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자녀 수에 따라 급격히 증가함.
  -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며, 여성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교육) 교육 문제 역시 자녀 양육의 부담을 가중함.
- 경쟁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못하게 함.
  - 공교육 체계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사교육에 몰입하는 상황을 초래함.
- (젠더) 성차별과 여성의 안전은 취약한 상태임.

- 가정 내 가사분담,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사회전반의 문제가 잔존함.
- 전통적 가족규범과 가부장적 사회문화 역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함.
  - 일상적 공포, 특정한 공간이나 상황에서는 그 공포가 더 강화되는 상황임.

○ (청년) 청년은 현재까지와는 다른 문명, 세대적 특성을 지니나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임.

- 청년세대의 특성을 여전히 전통적 인식틀로 규정하여, 19세기의 틀로 21세기를 바라보고 있음.
- 21세기의 청년 세대는 다른 문화배경에서 성장하여, 행동규범이나 가치관이 다양함을 고려해야함.
  - 일자리 등의 생활여건에 있어서는 취약한 상황이며, 다양성과 자율성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음.
  - 포기와 자발적 선택의 중첩 상황임.

□ 기존 정책적 대응의 한계

- 패러다임 전환 이후 세부 제도나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의문임.
- 돌봄 공백으로 인한 정책의 불충분성과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취약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이어져 온 한계가 있음.
  - 성평등 구현을 내세웠으나, 성평등한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함.

- 출산 지원 대책이 유배우 가구에 집중되어 있음.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여진히 고려하지 못함.
-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시작단계로 대체로 실험적 수준에 그침.
  -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매우 미흡한 단계임.
  - 지방 정부의 대책은 대체로 중앙정부의 공동사업을 일부 확대한 수준에 그치며, 보충적 차원에서 국비에 의존하여 추진됨.
  - 특히 지역의 인구 이동 관점에 대한 정책이 부재함.

□ 정책 제언

- 아동수당 해당 연령 확대(0~19세) 및 전국적으로 출산지원금 통일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전 자녀에게 보편적 지급으로 재편
- 출퇴근으로 인한 돌봄 곤란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 강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개선
- 보육시설 2교대를 통한 보육의 질 제고 및 일자리 확대
- 계층 구분의 낙인효과를 지양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의 통합적 운영 제고
- 지역아동센터의 다함께돌봄센터로의 전환과 관련한 제도적 기준 완화
- 물리적 돌봄 및 아이와 부모에 대한 동시적·정서적 돌봄 지원
- 돌봄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간 통합 필요

- LH 임대주택 주거면적 고려 및 낙인방지를 위한 명칭 개선
- 서울시 사회주택과 같이 신혼부부나 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시, 급여 삭감 없이 지원
- 출산휴가 6개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상한서의 폐지
- 지자체 간 청년배당 격차 해소
- 전 생애주기에서 성평등 교육, 사업주의 성평등 교육 확대
- 정책 정보 구득에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 정책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통로 정리

#### 나. 고령사회 분야

- 지역 토론회를 통해 파악된 고령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노인의 경제적 빈곤, 젠더 및 다차원성에 대한 미흡한 고려를 들 수 있음.
- (빈곤) 노인의 경제적 빈곤이 고령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45~50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을 고려한다면, 길게는 약 50년간 빈곤상태가 지속됨.
  -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빈곤 문제가 지속됨.
- (젠더) 노인에게도 젠더관점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노인빈곤의 절대 다수가 여성 독거노인인 상황으로 연금 설계 방식 등에서의 고려가 미흡함.
  - 노인 일자리 중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공익형 일자리

참여노인의 약 70% 이상이 여성인 반면, 고수익에 속하는 시장형 일자리는 남성노인이 다수인 상황

- (다차원성) 노인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다각화된 정책 접근이 요구됨.
  -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세대 진입으로 노인 집단 내 다양성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집단에 따른 차별적 욕구가 있으나, 관련 정책에서 이에 대한 반영이 적음.
  - 노인의 건강, 학력 수준 등 변화되는 특성을 반영할 때,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기존 정책적 대응의 한계

- 기존 단순한 노인복지정책 접근으로는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사회참여(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등) 정책 및 노인보호 정책 확대 편성에 있어 세밀함이 부족함.
  - 특히 노인 일자리 다양화에 있어 탐색적 실험을 통한 성별, 계층별, 지역별 일자리 다양화에 대한 고민이 미흡함.
- 전통적 가족의 부양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 돌봄 정책 설계로 서비스 공백이 존재함.
- 노인의 욕구와 제공 서비스 간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음.
  - 남성노인의 자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나, 공동생활 홈과 같은 시설은 여성노인이 대부분 이용하는 상황 등
- 일부 지역의 경우 노인 수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

며, 신중년을 위한 플랫폼은 부재한 현실임.

□ 정책 제언

- 소득보장체계 강화 뿐 아니라 강화된 다층소득보장 방안 마련 필요
- 노인 일자리사업과 소득보장 사업 간 구분 명확화
- 여성노인의 빈곤 해결을 위한 연금 독립 수급권 확보 및 여성의 임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노인 일자리의 성별 차이 해소를 위한 여성노인 맞춤형 수익성 일자리 발굴
- 노인 돌봄서비스 개편에 따른 돌봄서비스 공급기관의 법인시설로의 제한 재검토
- 지역 내 노인돌봄사업 일환으로 마을 관리소 설치를 통한 일상적 욕구 해소
- 양질의 돌봄인력 수급을 통한 서비스 질적 제고
- 노인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한 노인복지정책 다양화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다양성 확보
  -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당 숙식지원 방안 고려
-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확대
- 사회복지 정보 제공 방식의 다각화
- 정년연장 및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 세대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다. 인구 및 지역 쟁점

- 지역의 인구문제는 비단 출산에 국한되지 않음.
  - 지역(도시-지방, 중소도시-농어촌)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차별적 욕구 반영이 필요함.
  -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문제는 매우 시급한 쟁점임.
  - 인구분산 정책의 다각화가 필요함.
    - 인구분산과 같은 물리적 재치
    - 사회적 구성물인 연령을 조정하여 인구구조의 사회적 재배치
  
- 기본계획의 포괄범위나 정책목표,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함.
  - 기본계획에 지역에 대한 고려나 이동의 관점이 부재함.
    - 지역 균형 발전, 인구분산 정책, 인구 이동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연계가 필요함.
  
-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함.
  - 교부금 배분에 있어 획일적으로 인구에 비례한 방식이 아닌 재정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인구집중으로 창출되는 부의 분배 정의 검토가 요구됨.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지방 이양을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의 자율권을 고려해야 함.

#### 4. 종합 논의 및 향후 과제

##### 가. 종합 논의

###### □ 세 가지 새로운 이슈의 등장

- 청년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제시됨
  - 우선 청년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취약한 점이 지적되었음. 기성세대가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년세대는 견고한 기존 질서에서 자원을 축적하는데 한계를 나타나내고 있음.
  -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음. 21세기 청년세대는 성장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전자 기기 사용, SNS를 통한 소통 등을 거치면서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됨. 그 특징으로 자유롭고, 기존의 형식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을 나타냄.
  - 청년세대는 젠더 이슈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부분적으로 성별 갈등을 주저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냄.
- 노인집단 구성의 다양성
  - 기존 노인도 계층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본격 진입하면서, 전체 노인의 집단별 욕구의 다양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음.
- 지역의 인구 문제 등장
  - 지역의 인구가동과 분포의 불균형이 강화되고 있음. 지역의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인구의 집중은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어 50% 수준에 도달하였음.

- 지역에서 인구 위기감이 확대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자율권 주장이 강화되고 있음.

#### □ 기존 기본계획의 한계

##### ○ 저출산 영역

- 기존의 기본계획은 인구의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저출산 현상 대응에 집중하였음.
- 기혼가구(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만 초점을 둔 돌봄 정책과 일 가정양립 정책에 집중하였음. 미혼 집단이나, 무자녀 가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 고령사회 영역

- 전통적 노인복지 정책 관점에서 취약계층 혹은 남성노인을 중심으로 정책 운영. 여성 노인의 취약점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부족하고, 노인의 다양성에 따른 정책의 세밀함이 부족함

##### ○ 인구 영역

- 인구변동이 점차 진행되면서, 인구 집단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책적 대응의 세밀함은 부족하였음. 특히 지역의 인구 이동에 의해 쟁점화되고 있는 문제는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었음.

#### □ 인구현상

##### ○ 인구변동(혼인, 출산, 이동)

- 인구변동은 거대한 구조적 변화이지만, 이 변동은 개인의 선택

- 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 즉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나 제도, 문화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회환경적 요인은 문화, 교육, 노동, 주거, 돌봄 등과 복잡하게 연계된 맥락 안에서 결정되고 있음.

○ 인구(사회)현상 복잡성 증가

- 젠더, 계층, 다문화, 세대 등이 다변화되면서, 가족, 성별, 연령, 지역 등의 전통적 경계가 변화하고 있음. 집단의 경계가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성이 교차하면서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현, 인구현상은 복잡성의 맥락에서 볼 때, 현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자연적 변화와 더불어, 한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발생시키는 병리적 현상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

○ 저출산

-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성, 일자리, 기회의 불평등 하에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 혹은 비(非)선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정됨

○ 사회적 이동

- 개인은 결국 자신의 삶의 조건이 유리한 공간으로의 지속적 이동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사회적 특성을 집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패러다임 전환과 로드맵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화에 대하여 의

문을 제기하고, 향후 더욱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함.

□ 향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 (추진방향)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청소년, 청년, 성년, 노년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 지향하는 것이 중요
-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되, 병리적 현상이나 미충족 욕구는 국가의 책무로 해소해야 함.
- 성, 계층, 지역, 연령, 학력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드러남.
- 사회 성원으로 정착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만들어, 좋은 학력과 학벌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는 경쟁 구도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 생애주기 각 이행 단계 간 연계 강화: 기존의 기본계획이 기혼 가구에 집중하였다면, 미혼 집단부터 가족형성 초기, 자녀 양육기, 중장층 부모 부양기, 마지막으로 노년기까지 각 단계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균형: 기존의 인구정책이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노동력의 수급, 출산율과 출생아수와 같은 인구의 양적 측면에 집중하였음. 향후는 아동의 건강과 여가, 모성의 건강, 삶의 질과 같은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 대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 규모와 구조 뿐 아니라 분포의 측면 고려: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지역간 인구 불균형, 인구이동 현상에 대한 관심을 본격화 할 단계임
- 부처간, 정책 영역간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프레임 구축: 현재의 인구문제 또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는 부처간, 영역 간 경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방정부의 자율권 및 재정지원 강화: 지역 인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행정체계 및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원투자에 대한 획기적 확대: 현 수준에서 OECD 회원국에 비해서 가족지출 수준이나, 일가정양립 지출 수준이 저조한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획기적 수준의 재정 투입이 요구됨.

#### 나. 향후 과제

- 인구정책의 포괄성을 고려할 때, 제4차 기본계획에서 담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고려
- 그동안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못했던 다양한 인구 문제를 제4차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그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절실히 요구됨.
- 인구정책,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기존의 다양한 사회정책(교육, 노동, 산업 등)간 연계 방안 확보가 필요함.
- 특히 지역 인구문제를 고려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분야 정부 위

원회나 관련 정부 종합계획과의 협의는 필수적으로 요구됨.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방안에 대한 고려

○ 지역 인구 문제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부록

## 부록 1. 지역 토론회 참여 전문가 명단

지역	성함	소속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실장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연구위원
	박종훈	한밭대학교 교수
	정진숙	대전어린이집 연합회장
충청남도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기획조정실장
	최은희	충남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혜경	백석대학교 교수
	모선희	공주대학교 교수
	맹준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남진열	제주대학교 교수
	공선희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훈	제주국제대학교 겸임교수
	오명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오윤정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울산광역시	이윤형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실장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현욱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혜경	울산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서화정	춘해보건대학교 교수
경상남도	김진	춘해보건대학교 교수
	이혜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임숙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이정은	창원대학교 교수
	이연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부산광역시	하택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원장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이기영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
	권현주	부산대학교 교수
	박현정	전 일본 센다이대학 교수
	이지연	애광노인전문요양원 원장
박기현	동의대학교	

지역	성함	소속	
	허 은	사랑동이 어린이집 원장	
	석태호	퇴직 중장년	
	박우연	다사랑문화회관 운영위원	
강원도	유은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서영주	강원도 여성특별보좌관	
	백학영	강원대학교 교수	
	김여진	강원대학교 교수	
	박상현	강원연구원 실장	
	노주비	관광두레 청년피디	
	길근수	시니어클럽 단장	
	양원성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본부장	
	정민석	행복체험수기 당선자	
	이창주	강원도 100인아빠단 활동가	
	경상북도	이진숙	대구대학교 교수
		오정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진혜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권용신		경북행복재단 복지정책팀장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 회장	
김수정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회원	
박명배		안동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	
장훈성		경북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정지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우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행정원	
대구광역시		성지혜	대구여성가족재단 실장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신형진	경북대학교 교수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은	경북대학교 교수	
	박정숙	계명대학교 교수	
	김창규	대구중구노인복지관 관장	
	추시은	풀뿌리 여성모임 대표	
	장윤호	진명고향마을 사무국장	
	채석규	신통납 프로그램 참여자	
	배보람	경북대학교	
충청북도	최승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규량	교통대학교 교수	
	구철희	청주대학교 교수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최원진	청주상당시니어클럽 팀장	
	김태윤	충북 공동체 시민센터장	

지역	성함	소속	
	한재희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신우석	충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장	
	박미영	청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광주광역시	김진희	광주복지재단 정책개발팀장	
	양철호	동신대학교 교수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정란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재철	광주동구시니어클럽 실장	
	엄향옥	빛고을노인타운 운영위원	
	임선주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장	
	장은미	광주지역아동센터 지원단장	
	김진산	인구보건복지협회 과장	
	한지성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경기도	이삼식	한양대 교수
윤형중		LAB2050	
최진호		이주대학교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이병호		이주대학교 교수	
인천광역시	최윤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지훈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박주은	인천여성가족재단 실장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	
	구혜완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남일성	성공회대학교 교수	
	조선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제석	인천광역시 과장	
	윤병석	인천광역시 과장	
	전라북도	강영숙	군산대학교 교수
		이영환	전북대학교 교수
김순규		전북대학교 교수	
이혜숙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문윤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이남주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부센터장	
이진홍		희망연대 사무국장	
김수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선민		인구보건복지협회 과장	
원 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소장	
서울특별시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성재	서울대학교 교수	
	신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익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소랑	서울시 50+재단	
	박현용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84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사례 분석 연구

지역	성함	소속
	조범기	서울시니어클럽협회장
	박준시	서초중앙노인복지관장
	김은주	추억을 파는 극장 대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주: 1) 토론회에 참여한 좌장, 발표자 및 토론자(전문가 패널, 시민 패널) 명단임.  
 2) 부록 1의 명기 순과 본문 내 명기 순은 상이함.

부록 2. 종합 논의 결과<sup>2)</sup>

**17개 지역 순회 토론회  
주요 논의 결과**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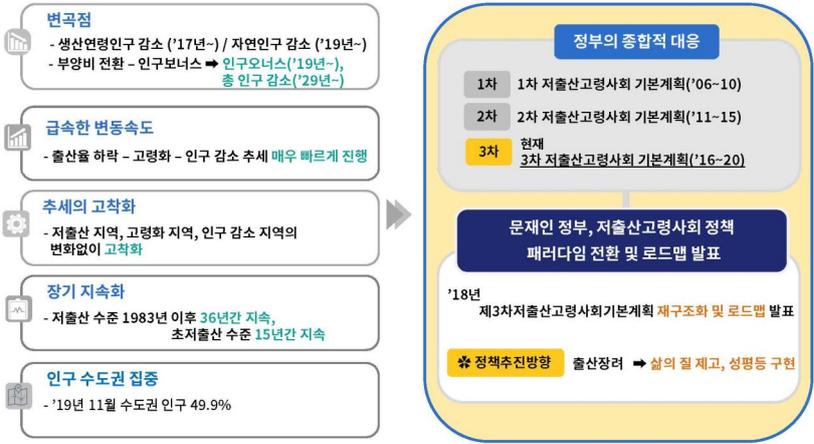
<b>I</b>	<b>지역토론회 추진 배경</b>	<b>1</b>
<b>II</b>	<b>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b>	<b>3</b>
<b>III</b>	<b>종합논의 및 향후 논의 과제</b>	<b>18</b>

<sup>2)</sup> 본 보고서 제3장 제2절의 내용을 도식화한 자료임.

# I. 지역토론회 추진 배경

## I. 지역토론회 추진 배경 PART. 01

### 1. 인구변동의 주요 특징 및 정부의 종합적 대응



# I. 지역토론회 추진 배경

PART.01

## 2. 지역 토론회 추진내용

✓ 내년도 수립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지역 현안 및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9년 10월부터 총 9주간에 걸쳐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 발표자 26명, 전문가 패널 48명, 청년패널 38명, 양육부모 및 중장년 42명 외 관심 있는 다수의 청중

일시	장소	일시	장소
10.22	대전세종연구원	11.27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1.1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1.28	대구여성가족재단
11.13	제주연구원	12.4	충북연구원
11.19	울산발전연구원	12.10	광주복지재단
11.20	경남연구원	12.10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1.21	부산복지개발원	12.18	인천여성가족재단 전북연구원
11.26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12.19	서울연구원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 1. 저출산 분야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 02

**\* 저출산 분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주요 **문제 인식** : 주거, 일자리, 자녀양육 부담, 교육문제, 젠더이슈 등 다양

**주거**  
✓ **주거문제**는 청년세대, 신혼부부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  
... 사회생활 시작 후 첫 주택 구입 시기 6~10년 (소비가 없다는 가정 하)  
...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 30% 수준  
...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선결요건**은 주택

**일자리**  
✓ **일자리**는 생활안정의 기반,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 대학 진학률은 70% 수준에 육박하여 양질의 노동이 공급되나, 고용률은 50% 수준  
... 여성은 일가정 양립 어려움, 경력단절, 재취업시 일자리 하향이동 등 열악  
... 성별/여성 내 일자리 양극화(경력단절 및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가능성 차별적)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 02

**\* 저출산 분야** [정책대응의 한계]

- 1 패러다임 전환 이후  
세부 제도나 정책 구체화 의문, 지방까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하지 못함
- 2 돌봄공백 여전,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취약가족중심 정책, 성평등 정책 실효성 미흡,  
아동정책 불충분
- 3 출산지원 대책 유배우 가구에 집중  
...청년지원정책 시작단계로 대체로 실험적
- 4 지방정부 대책 중앙정부 공동사업 일부 확대  
...보충적 차원에서 국비에 의존하여 추진
- 5 지역적 특성(도시-지방의 사회경제적 차이)을 고려한  
정책 매우 미흡, 인구 이동 관점의 정책 부재



8

KHWA20240201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 02

**\* 저출산 분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주요 **문제 인식** : 주거, 일자리, 자녀양육 부담, 교육문제, 젠더이슈 등 다양

**젠더**

- ✓ 성차별과 취약한 여성의 안전
- ... 가정 내 가사분담, 직장 내 성차별, 사회전반의 성희롱/ 성폭력 우려
- ... 전통적 가족규범, 가부장적 사회문화 구조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
- ... 일상적 공포, 특정 공간이나 상황에서는 공포가 더 강화되는 상황

**청년**

- ✓ 세대특성, 다른 문명, 몰이해
- 청년세대의 특성을 여전히 **전통적 인식**들로 규정, 19세기의 틀로 21세기를 바라봄
- ... 21세기 청년 세대는 다른 문화배경에서 성장, 행동규범이나 가치관 다양
- ... 일자리 등 생활기반 취약, 다양성과 자율성 이해받지 못함
- ... 포기과 자발적 선택의 중첩 : 3포 / n포 / 3비(非)

- 21세기 한국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상황은 '전통적 가족'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나 국가는 청년에게 '전통적 가족'을 만들어 살라고 강요
- 포기 또는 자발적으로 비(非) 선택하면 더 행복해지는지 왜 그것을 선택하겠는가?

7

KHWA20240201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02

### \* 저출산 분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주요 **문제 인식** : 주거, 일자리, 자녀양육 부담, 교육문제, 젠더이슈 등 다양

### 자녀 양육

#### ✓ 자녀양육 가구의 소득기반 취약, 돌봄공백 여진

- ...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자녀 수에 따라 급격히 증가
- ...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공백 여진(긴급보육, 야간보육, 초등돌봄)
- ... 직장 및 가정의 양 측면에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가중

### 교육

#### ✓ 교육문제는 자녀양육 부담 가중

- ... 경쟁적 사회구조(문화)는 자녀 교육 투자를 멈추지 못하게 함
- ... 공교육 체계의 신뢰 취약 ⇒ 사교육 몰입

6

KMSA한국사회조사연구원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02

### \* 저출산 분야

[정책 제언]

- 아동수당 0~19세 & 출산축하금 전국 통일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전 자녀에게 보편적용
- 출퇴근으로 인한 돌봄 곤란 시간대(오후 5~8시) 돌봄 서비스 강화 필요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개선
- 보육시설 2교대(08~15/12~20) 통한 보육의 질 제고 및 일자리 확대
- 계층구분으로 인한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통합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전환을 위해 제도적 기준 완화 필요
- 물리적 돌봄 및 아이/부모의 정서적 돌봄 지원
- 돌봄 사업 정부 부처간 통합 필요

9

KMSA한국사회조사연구원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 02

**\* 저출산 분야** [정책 제언]

- 내임대주택 주거면적(14평) 고려 / 낙인효과(휴먼시아거지) 방지를 위한 명칭 개선
- 신혼부부, 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에-서울시 사회주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시 급여 삭감 없이 지원
- 출산휴가 6개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상한선 폐지
- 지자체 간 청년배당 격차 해소 필요
- 전 생애주기에서 성평등 교육, 사업주의 성평등 교육 필요
- 정책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통로 정리
  - ...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정책정보 구득에 더 취약

**지역사례**

- ✓신혼부부 주택보증금 이자 보전사업(연 56억 편성)
- ✓청년일자리 사업(뉴딜일자리사업)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 02

**\* 고령사회 분야** [정책대응의 한계]

- 1 | 기존 단순한 노인복지정책 접근으로는 **고령화 현상 대응에 한계**
- 2 | 사회참여(여가문화 지원 및 자원봉사 등) 정책 및 노인보호 정책 확대의 **세밀함 부족**
- 3 | 노인 일자리 다양화에 있어 탐색적 실험을 통한 **성별, 계층별, 지역별 일자리 다양화 고민 미흡**
- 4 | 전통적 가족 부양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돌봄 정책 설계
- 5 | **노인의 욕구/실태와 서비스간 미스매치**
  - ... 공동생활홈과 같은 시설은 많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여성
  - ... 남성노인의 자살률이 더 높음을 감안할 때, 자살, 우울예방 효과가 미흡
- 6 | 일부 지역 노인 수 대비 **노인복지인프라 매우 부족 & 신중년층을 위한 플랫폼 부재**

## 2. 고령사회 분야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02

#### \* 고령사회 분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주요 **문제 인식**: 노인의 경제적 빈곤, 노인의 젠더 및 다차원성에 대한 고려 미흡

#### 빈곤

✓ 경제적 빈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 45~50세 노동시장 은퇴를 고려한다면, 길게 약 50년간 빈곤 상태 지속
- ...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 역사가 짧고, 사각지대 광범위

#### 젠더

✓ 노인젠더 관점을 고려한 정책 필요

- ... 노인빈곤 절대 다수가 여성 독거노인인 상황 (예: A지역 전체 빈곤노인 중 노인단독가구 비율 76.2%, 여성 독거노인 81.3%)
- ... 현재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의 70% 이상이 여성노인,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남성노인이 다수

#### 다차원성

✓ 노인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정책접근 다각화

- ...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으로 인한 노인 내 집단 다양성 증가
- ... 집단에 따른 차별적 욕구로 인한 소득보장 및 문화여가 정책 등 차별화 필요
- ...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노인 소득계층에 따른 상이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적 접근 다각화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02

### ※ 고령사회 분야

[정책 제언]

- 소득보장체계 강화 뿐 아니라 **다중소득보장 방안 중요** & 보충적 소득보장원 다양화
- 노인 일자리사업과 소득보장 사업 구분
- 여성노인의 빈곤 해결을 위한 **여성 연금 독립 수급권 확보**, 여성 임의가입 지원
- 노인 일자리의 성별 차이 해소를 위해 **여성노인 맞춤형 수익성 일자리 발굴**
- 커뮤니티케어 사업대상에 **여성 돌봄 제공자**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 노인돌봄서비스 개편에 따라 돌봄서비스 법인시설로의 제한 재검토
- 지역 내 노인돌봄사업 일환으로 마을관리소 설치 (뉴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일상적 욕구 해소
- **돌봄인력 고령화** 심각한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여 젊은 인력 충원 필요

14

KHWON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02

### ※ 고령사회 분야

[정책 제언]

- 노인 집단의 다양성 고려, 소득보장 및 일자리 사업 이외의 **프로그램 다각화** ... 컴퓨터 강좌만 10년에 운영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다양화**  
...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당 숙식지원 방안 고려
- 앞으로 모든 주택과 건물에 대해 **노인을 기준으로 건축**
- 사회복지정보 제공방식의 **다각화**  
... 사회복지정보 제공의 일원화는 일회적 제공 방식으로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정년 연장, 노인 연령 **상향조정**
- 세대 통합 프로그램 : 커뮤니티 케어, 인생이모작 등의 프로그램에 청년 참여

15

KHWON

### 3. 인구 및 지역 쟁점

## II. 영역별 주요 논의 내용

PART.02

### \* 인구 문제 및 지역 쟁점

#### ☑ 인구문제에서 지역의 쟁점은 출산만의 문제가 아님

- 인구의 안정성은 출산보다는 이동의 효과 (예: 제주)
- 지역(도시·지방/중소도시·농어촌)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욕구 차별적
-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문제는 시급한 쟁점
- 인구분산 정책의 다각화
  - ... 인구분산과 같은 물리적 재치
  - ... 사회적 구성물인 연령기준 조정으로 인구구조 사회적 재배치

#### ☑ 기본계획 포괄범위, 정책 목표 및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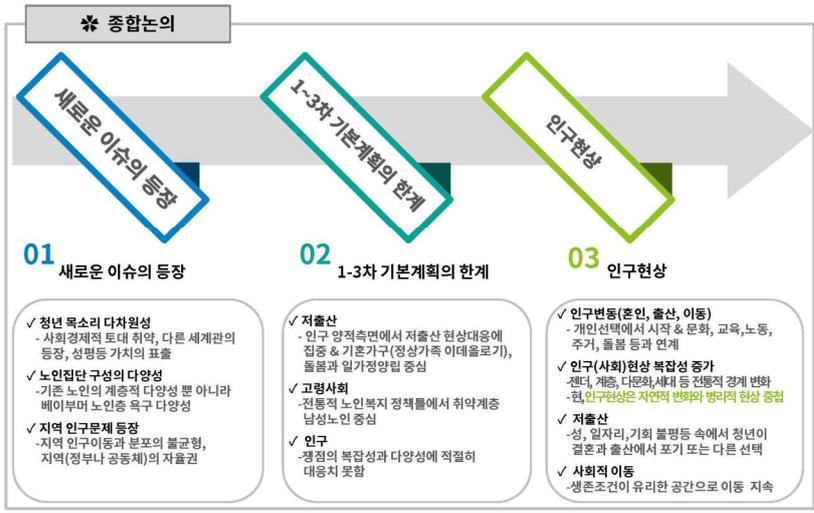
- 기본계획에 지역에 대한 고려나 이동 관련 부재
  - ... 지역균형 발전, 인구분산 정책, 인구 이동 관련 고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연계

#### ☑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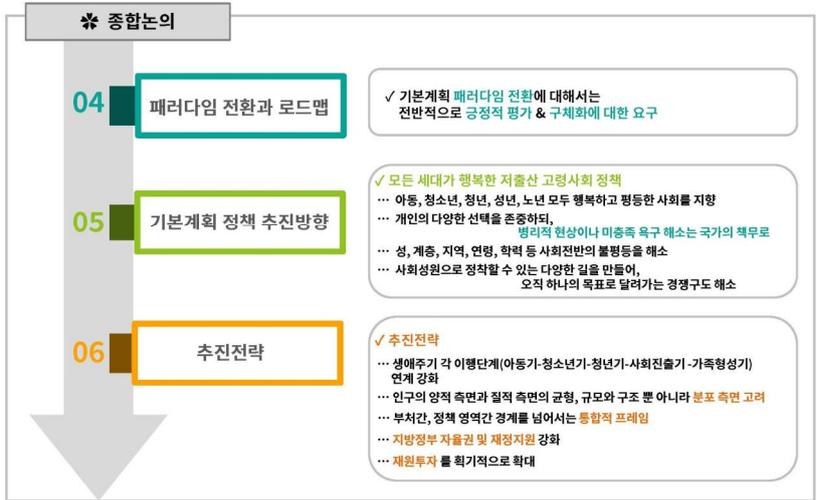
-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성 고려(확실적 인구비례 배분 문제)
- 인구집중으로 창출되는 부의 분배 정의 검토(고령세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 지방이양 검토하여 지역맞춤형 사업 자율권 고려

# III. 종합 논의 및 향후 과제

III. 종합 논의 및 향후 과제 PART. 03



III. 종합 논의 및 향후 과제 PART.03



III. 종합 논의 및 향후 과제 PART.03

**\* 향후 과제**

- 1 >✓ 인구정책은 포괄적 영역에 걸쳐있는데, 기본계획의 범위는 어디까지?
  - 2 >? 기본계획이 담지 못하는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3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4 >💡 인구정책에서 지역균형발전계획, 교육정책, 산업노동정책 등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